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52 - Winter 2023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52 - Winter 2023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2
Winter 2023

발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영범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심경미

편집
이미영, 김민자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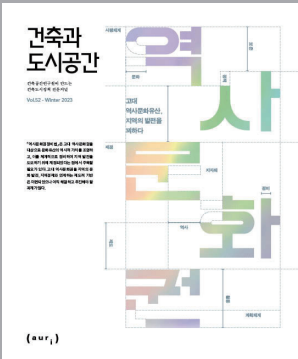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보전을 넘어 활용으로,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우리 역사문화유산을 현재 속에
더욱 가치롭게 지키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점차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써
역사문화유산을 다시 바라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더욱 고민해봅니다.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	노중국	006
국가유산 보호체계 변화와 역사문화권 정책	이종규	015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	성정용	023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군 역사문화유산 활용 현황과 과제	조신규	032
역사문화권 계획체계의 이해와 시행계획 수립 방향	심경미	042
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방향	김중범	052

통계자료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은?	김영하	060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 자연 속의 도시로 향하는 여정	최윤경	066
	파리의 개인형 이동수단 금지 정책과 도시 친환경 이동수단 정착 방향	유무중	073
국내동향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경과 및 수상작 소개	유예슬	078
해외단신	2023 세계건축축제 올해의 건축상에 틀을 깬 학교 건축 선정 외		082
국내단신	행정안전부, 휠체어 이용 어린이 위한 안전한 놀이터 환경 조성 외		086

장소탐방

모든 청소년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 펀그라운드 진점	신호섭·신경미	092
숲속, 우리들의 비밀기지 -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조진만	108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28
·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130
· 2023 녹색건축 미래포럼 개최	131
·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 공동 개최	131
·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132
· 2023 보행공정포럼 제2~4회 개최	132
·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 개최	133
· 2023 공공건축 포럼 개최	133
·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134
· 2023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포럼 개최	134
·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개최	135
·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공동포럼 개최	135
·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36
· 2023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개최	136
· The 2nd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137
·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37
·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38
· 2023 공공건축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139
· 건축공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MOU 체결	139
·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식 개최	140
· 2023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140
·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 개최	141
·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141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되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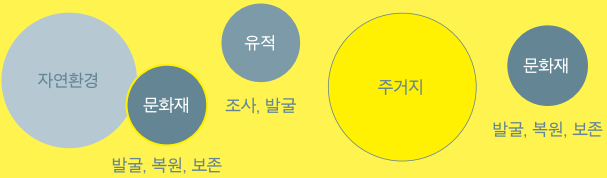
1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취지와 정책추진 현황, 시행체계를 소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와 함께 국내 역사문화권의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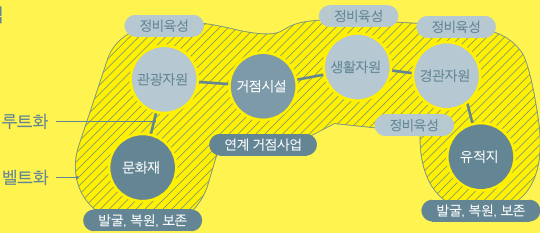


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개념도

정비구역



연천의 홀로고루와 주변 지역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 |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토대로 주민들의 삶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국가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시행되는 정비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산 보호체계 변화와 역사문화권 정책 | 국가적 자산이자 국가의 상징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존의 대상으로서 재화적 개념이었던 ‘문화재’를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며 시간적·공간적 확장 개념인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 |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역사문화권정비법」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그간의 비지정문화유산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군 역사문화유산 활용 현황과 과제 | 역사문화유산과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요구를 거절하고 일반적 개발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함안뿐만이 아닌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어느 선택의 기회비용이 큰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역사문화권 계획체계의 이해와 시행계획 수립 방향 |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과 주요 내용,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방향 | 핵심은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다. 문화유산이 규제라는 인식을 그치고, 지역 활성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함께 엮어 나갈지에 대한 종합구상이 필요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

노중국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장

문화유산 관련 주요 법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은 현재의 법의 보호하에 보존되고, 미래로 전달된다. 해방 이후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다. 저개발국가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는 목적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정 구역과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준다는 원성이 없지 않았지만, 1970년대 이후 불어닥친 개발의 압력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켜 주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 법은 ‘보호’에서 ‘보존과 활용’에 중점을 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대폭 개정되어 2024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4년에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고도(古都)의 경우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 지구의 범위보다 폭넓은 면적 보존과 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11년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으로 개정되어 고도의 보존뿐만 아니라 고도 육성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만 고도를 경주, 공주, 부여, 익산으로 한정된 것은 이 법이 가지는 한계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1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매장문화유산 유존(遺存) 지역이 설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

로 실체 규명이 필요한 매장문화유산의 보호, 조사 그리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2023년에 등재된 가야고분군까지 총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등재된 세계유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법에 맞추어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세계유산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국내 규정과 국제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외에 특정 유산을 보호·정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19년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과정과 개정*

이러한 일련의 법과 연동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핵심 용어는 ‘역사문화권’이다. 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말한다.

‘문화권’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재청이 1988년부터 문화권 유적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이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역사적·학술적·지정학적 관점에서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지고 있는 대표적 권역을 ‘역사문화권’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제1차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계획(1988~1997)’에는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다도해문화권, 영산강유역문화권이 포함되었다. 제2차 ‘종합정비 계획(1998~2002)’에는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다도해문화권, 강화문화권, 안동·영주문화권이 포함되었다. 제3차 ‘종합정비 계획(2003~2007)’에

*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온공간연구소가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연구>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는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영산강·다도해문화권, 강화문화권, 고구려·고려문화권이 포함되었다. 제4차 ‘종합정비 계획(2008~2012)’에는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고구려문화권, 강화문화권, 영산강·다도해문화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계획에서는 문화권 안에 있는 단위 문화유산의 점적인 보존·관리에 치중하여 주변 환경과 연계한 역사적 환경 조성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유적 정비 사업은 주변 환경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촉진한 것이 가야문화권의 보존·정비였다.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지자체는 김해시·고령군·함안군·함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경북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였다.

2015~2017년에 가야문화권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자극받아 다른 역사문화권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에서도 그 지역의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8~2019년에 탐라문화권 관련 특별법안이, 2019년에 마한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등이 발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문화재청은 2018년에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

한국 고대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제안 및 입법 현황

권역 대상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제정 여부
역사문화권	1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12.15.	
	2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	2018.3.13.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2019.4.11	2020.6.9. 제정
개별 문화권	1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5.7.23.	
	2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6.6.16.	
	3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8.25.	
	4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8.11.1.	
	5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11.5.	
	6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6.27.	
기타	1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2.28.	2020.6.9. 제정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5.29.	2019.12.10. 제정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5.30.	

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특별법은 문화권형 특정 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하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문화재청의 특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의 지정·연구와 조사 및 발굴 정비계획 수립, 연구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발의된 법들을 통합하여 정리한 법이 바로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12호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이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1년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계획상의 문화권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한국 고대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등 여섯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법이 공포된 이후 역사문화권의 공간 범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일어났다. 논란의 핵심은 영산강 유역으로 한정된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과 ‘중원역사문화권’을 별도의 문화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1년 12월에 개정된 법에는 기존의 마한역사문화권에 충청·광주·전북 지역을 포함시켰고, 충북·강원·경북·경기도 일부를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7일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추가되어 총 아홉 개의 역사문화권이 설정되었다. 아홉 개의 역사문화권은 ①고구려역사문화권, ②백제역사문화권, ③신라역사문화권, ④가야역사문화권, ⑤마한역사문화권, ⑥탐라역사문화권, ⑦중원역사문화권, ⑧예맥역사문화권, ⑨후백제역사문화권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이 가지는 의의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한국 고대의 문화유산이다. 한국고대사는 위로는 고조선으로부터 아래로는 후삼국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며, 공간 범위는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문화유산은 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대문화유산 수

광역시자치단체	건수(건)	광역시자치단체	건수(건)
서울특별시	81	강원도	544
인천광역시	80	대구광역시	401
경기도	1,196	경상북도	3,739
대전광역시	100	부산광역시	179
세종특별자치시	91	울산광역시	602
충청남도	1,397	경상남도	2,120
충청북도	723	제주특별자치도	277
광주광역시	132	총계	14,199
전라북도	1,437	자치단체 중복 17건	
전라남도	1,100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2022)

남한에 남아 있는 고대문화유산의 수는 1만 4,182건 정도이다. 이 가운데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635건으로 전체의 4.5% 정도이고, 광역시·도 지정 문화유산은 798건으로 전체의 5.6% 정도이며, 둘을 합해도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비지정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지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에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아무런 조사·연구도 없이 파괴되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지정 문화유산도 당해 유산의 ‘보존’, ‘정비’,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면 단위 관리’와 역사문화 공간적 관점에서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보호구역 밖의 공간이 유산과 조화되지 않아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지정 문화유산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산과 그 유산을 둘러싼 주변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면 단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로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책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비법의 목적은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지정 문화유산도 조사·연구하고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정 문화유산 구역의 주변 지역도 유산과 어울리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지정되지 못한 다수의 매장 문화유산을 ‘비지정 미래 유산’으로 명명하고, ‘목록유산’ 개념을 신설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나라 고대문화유산에는 유형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월대보름의 기원이 되는 오기일, 박제상 전설, 청도 운문사의 까치 전설과 배나무 전설 등 무형유산도 많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속에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의 전설과 설화를 비롯한 각종 구전 자료 등 무형유산들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무형유산도 유형유산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보존·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육성법」에 의하면 고도 유산의 조사·연구·보존·관리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권역 차원에서 역사문화공간을 통합적·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먼 단위 정비를 확대 적용하여 유산이 위치한 도시와 마을 전체와의 연계성 속에서 문화유산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국 고대의 문화유산은 기초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서 분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광역시·도를 넘어서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육성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유적·유물을 관리·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의 역사문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여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연계는 물론 초광역 단위로 문화유산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목적에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발전’이란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역사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은 단순한 역사문화의 향유자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체로서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활용하는데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유산과 지역민의 삶을 연결하는 주민밀착형 유산 보호·관리·활용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설정과 정비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은 기초지자체의 몫이다. 기초지자체가 이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문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8조(전문인력 양성)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장학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에서는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외에 주민과의 협력이나 홍보와 교류 등을 수행할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연구하고 홍보·활용하는 정책 개발 등의 일들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정책 추진을 위한 유의점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기초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의 정책 지향점을 바탕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정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정비시행계획이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실시계획’을 세워 실시해 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가 정비시행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편익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있

다. 정비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정비’는 유산의 보존을 토대로 하여 비지정 유산과 지정 유산 주변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것, 즉 ‘역사문화 공간의 조성’을 의미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한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문화권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문화의 중첩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 정비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주민밀착형 계획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시행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속에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각종 무형유산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보완해야 할 사항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지정문화유산에도 국가의 손길이 닿도록 한 획기적인 법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토대로 주민들의 삶의 편익을 도모하는 마중물이 되는 법이다. 그럼에도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앞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고구려역사문화권과 백제역사문화권은 국가 중심이고, 예맥역사문화권은 종족 중심이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지역 중심이다. 역사문화권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삼한(마한·진한·변한) 가운데 ‘진한역사문화권’과 ‘변한역사문화권’이 빠졌고, 마한역사문화권에는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삼국의 하나인 ‘태봉역사문화권’ 또한 빠져 있다. 7세기 후반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문화권’도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는 이빨이 빠진 것과 같다. ‘고조선역사문화권’과 ‘부여역사문화권’ 그리고 ‘발해역사문화권’이 빠진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하위 문화권인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상위 문화권인 신라역사문화권 및 고구려역사문화권과 대등하게 놓음으로써 문화권의 경중을 구별할 수 없게 한 것도 문제이다. 삼

국이 대치한 접경 지역은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문화가 복합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는데, 현재의 문화권 설정으로는 문화의 ‘중첩성’과 ‘복합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미비점은 한국 고대사의 이해 체계와 충돌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어렵게 한다.

한국 고대의 역사문화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 통일과 분열, 재통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국가가 만들어 낸 문화가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역사문화권을 설정할 때는 국가의 성립과 그 변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설정된 문화권 안에는 시기를 달리하는 문화가 중첩되고 복합되어 있으므로 ‘아문화권’과 ‘복합문화권’을 설정하여 그 특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한국 고대사의 이해 체계와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 2 중앙문화재연구원, (2022). 역사문화권 유·무형 유산 기초조사 연구-유·무형 유산 기초 현황 및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보고자료,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보호체계 변화와 역사문화권 정책

이종규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사무관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및 관점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정책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보존철학과 윤리의 담론변화에 조용하며 변화해 왔다. 문화재의 법적·정책적 개념은 근대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초기의 문화재 개념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가치 있고 희소하며 귀중한 기념물이나 유적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상징물’이자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현세대의 보호의무, 미래세대로의 전승의 의미,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는 한편 문화유산의 외연도 가치·공간·시간적 측면에서 확장되어 왔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 역할 인식, 보존의 목적 및 대상, 보호행정의 성격 및 방식 등에 관한 변화는 각종 국제규범에 채택되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원칙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64년 제정된 베니스 헌장은 기념물의 보존은 주변 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고(제6조),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에서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제6조), 기념물과 그 주변 환경이 이루는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저해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역사적 도시나 소도시와 도심지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채택한 발레타 원칙에서는 ‘주

변 환경(setting)'을 '역사도시의 유산(heritage)이 인식·경험·향유되는 정적 또는 역동적인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유산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연결된 자연적 또는 인공적 맥락(context)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05년 EU 이사회가 채택한 '사회를 위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협약'은 문화적 환경과 문화유산, 인간의 삶과 질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Article 8),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Article 10).

이러한 일련의 국제규범들은 다음의 두 가지 문화유산 보호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먼저 '문화유산 환경보호의 원칙'이다. 문화유산은 원래의 위치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주변 환경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이루어 일정한 지역성과 장소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자연적·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까지 보호할 때 문화유산의 가치 또한 온전히 보호되는 것이고, 이렇게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문화적 환경(경관)을 형성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문화유산과 문화적 환경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보존의 원칙'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회 영역 속 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이 국토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발전)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통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문화유산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일자리 및 가계소득 창출, 도심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 아울러 문화유산은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창출함으로써 매력 있는 장소성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역에서의 문화유산은 문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장소성,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향유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개인 및 집단적 자긍심에 기여하고, 사회적 자본(신뢰)을 강화하여 사회(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문화유산은 환경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는데, 특히 역사적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자원 생

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전제조건인 활용의 한계 수준을 정함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지속가능한 보존은 시민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 왔다. 먼저 국가적 자산이자 국가의 상징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존의 대상으로서 재화적 개념이었던 ‘문화재’를 시간적·공간적 확장 개념인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 가치가 인정받은 결과이다. 또한 문화유산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민족문화의 상징물에서 사회·경제·환경 등의 다른 영역과 상호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보존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는데, 문화유산의 물리적 구조의 원형 보존을 중시하던 것에서 활용을 포함하여 공동체가 부여한 문화적 가치 보존에 더욱 방점이 찍혔다. 문화유산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 및 역할에 있어서도 ‘전문가’에 의한 통제에서 ‘시민’ 참여로, ‘중앙’ 주도보다 ‘지역 사회’의 주도가 중시되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 행정의 성격 및 방식도 ‘명령·통제’와 ‘배타적·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익조정’과 ‘포괄적·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제도는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대한 원칙과 관점의 역사적·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법제화·제도화되었다.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

구분	과거	현재
개념	문화재(property)	문화유산(heritage)
사회적 역할	국가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다른 사회영역과의 관계	독립된 영역	경제·사회·환경 등과의 유기적 관계
보존의 목적 및 대상	물리적 구조의 원형 보존	문화적 가치 보존
행위자 관계 및 역할	전문가에 의한 통제	시민 참여
행정의 성격 및 방식	명령·통제·하향식	이익조정·포괄적·상향식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현황

「역사문화권정비법」 주요 내용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모두 6장에 총 35개 조문과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제1조에서는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한다. 법 제2조 1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9대 권역을 ‘역사문화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각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대해 불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권역은 학술연구와 조사 성과의 축적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법 제2조 3호는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기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나 기존 활용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정비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것으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기초조사 실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조치 및 복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문화재청장이 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참여와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은 실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행위 등의 제한과 허가 등 의제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제14조 및 제17조는 기초지자체의 정비구역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설정에 관한 기

준 및 초광역단위 역사문화권 특성상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관해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법 제16조는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조문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완료 후 정비구역이 지정해제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정비사업 종료 이후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 조성’은 사업 비용이나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과 관련된 사항과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 역사문화경관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설정과 차별성 있는 사업내용 구상이 필요하고, 사업 집행 및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효과 달성을 위해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 절차

절차	세부 내용	주체
정비시행계획 작성·제출 기초지자체 작성 →광역지자체 검토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시행계획 포함사항(법 제17조 제2항)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비구역 지정 목적, 정비사업의 내용·기간 ·사업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연구·조사·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 ·정비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등	기초지자체
↓	↓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홈페이지 14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13조)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협의기간 20일(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문화재청
↓	↓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심의	주요 심의사항: 정비사업의 적정성	정비위원회
↓	↓	↓
정비시행계획 승인	정비시행계획 관보 고시 및 홈페이지 공고	문화재청
↓	↓	↓
실시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등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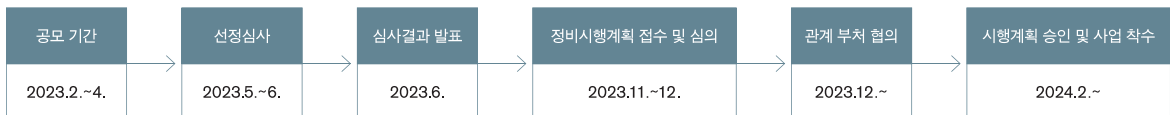
정책 추진 현황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제9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세워야 하며, 2022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정비사업, 역사문화권의 범위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비전과 지향점을 비롯해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①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 ②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③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④역사문화 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 활성화 추진, ⑤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⑥전문 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를 6대 정책과제로 세워 정책과제별로 추진방안과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②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가 실시되어 2022년부터 역사문화권별 역사문화환경 유·무형 유산 조사를 통해 1만 4,000여 건을 목록화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 DB화 및 역사문화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4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을 위해서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이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 인식 확산 및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모델 발굴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2월 선도사업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를 통해 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최대 3년간 사업별 총사업비 120여억 원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사업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 절차



정비사업의 내용은 해당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물리적·자연환경적·무형적 요소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환경이 지역 활성화의 콘텐츠가 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신뢰)을 강화하여 지역과 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공존·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2023년 정비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권을 초광역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기초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권별 고유한 맥락 속에서 기초 단위 정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초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2023년 마한역사문화권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과제

먼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이루고자 한다. 국회, 언론 및 지자체 등의 관심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 및 개정되고 역사문화권이 선정·확대(6곳 → 9곳)되었다. 그러나 아직 법 시행 초기로 일반 국민의 역사문화권에 대한 가치 인식은 미흡하고, 타 부처 유사사업(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 등)과 차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사업을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성공적으로 모델링하고 홍보·확산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 단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 사업의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 침체, 저성장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을 매개로 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전제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정비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추진 시 타 부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과 유사한 외국의 정책 사례로 일본의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기서 ‘역사적 풍치’란 ‘지역 고유의 역사 및 전통을 반영한 사람들의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및 주변의 시가지가 일체화되어 형성되어 온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의미한다. 기초지자체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역사적 건축물의 멸실이나 지역 경관 훼손을 줄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움직여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범부처 통합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지민. (2020).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재정립 방향 고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96, 295-337.
- 2 이순자. (2023).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이슈리포트 74호, 국토연구원.
-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검토보고서. (2019).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제도 개선 방안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들어가며

2020년 6월 9일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신규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월 18일과 금년 1월 17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세 개의 역사문화권이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역사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술하는 것과 같이 이 법은 사실 역사문화권의 정의와 공간 범위 설정 등에서 일정 부분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라고 한 것은 다른 문화유산 관련 법률과는 다소 결이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비지정문화유산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문화유산 관리·보존 정책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은 제2조에 담겨 있다. 2조 1항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 기존의 ‘문화재’가 곧 ‘문화유산’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필자도 이를 감안하여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는 유형과 무형 유산 모두 문화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 속에 유형과 무형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다. 한편 논지 전개상 필요하거나 혹은 현재의 법에 따른 정의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 문화재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혼용하였다.

구분	시간	공간
고구려역사문화권	고구려 시대	서울·경기·충북 지역 등
백제역사문화권	백제 시대	서울·경기·충청·전북 지역 중심
신라역사문화권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	경북 지역 중심
가야역사문화권	가야 시대	경남·경북·부산·전남·전북 지역 중심
마한역사문화권	마한 시대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 중심
탐라역사문화권	탐라 시대	제주 지역 중심
중원역사문화권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충북·강원·경북·경기 지역 중심
예맥역사문화권	예맥 시대	강원 지역 중심
후백제역사문화권	후백제 시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 중심

한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역사문화환경’(제2조 2항)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라 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제2조 3항)이며,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성격과 지향점

이러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역사문화권정비법」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그간의 비지정문화유산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유산 관련 특별법으로서 전국성

전술한 것과 같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외에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 등이 있다. 그런데 「역

사문화권정비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특별법들은 그 명칭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특정한 지역이나 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지원 대상이 대단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록 여러 개의 역사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문화권의 대상 지역은 결국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 전체이다. 즉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9개로 구분하고 그 지역을 특정하였지만, 이 법에서 주목할 것은 9개의 역사문화권역이 아니라 그 대상 공간이 곧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는 점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토대가 되는 역사문화권역들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권들을 특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고대 역사문화권으로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특정한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의 성격을 잘 조명할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느 지역이든 여러 역사문화권이 시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특정한 역사문화권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여러 역사문화권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화유산 관련 특별법의 목적과 대상

명칭	제정일	목적	공간 범위와 대상	행위제한
「고도육성법」	2004.3.5.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	경주·부여·공주·익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건축물 등의 신개축과 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택지 조성 및 토지 개간, 수목 식대, 도로 신설 등
「신라왕경법」	2019.12.10.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신라왕경 핵심유적(월성, 황룡사, 동궁, 월지, 첨성대 등)	
「풍납토성법」	2020.6.9.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	풍납토성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위임
「역사문화권정비법」	2020.6.9.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 등의 신개축과 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택지 조성 및 토지 개간, 수목 식대, 도로 신설 등(정비구역 해제되면 제한 없어짐)

래야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진정으로 전국적인 포괄성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그 의의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지정문화유산의 소외 현상 극복과 무형 유산의 지원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1항). 원론적으로는 모든 문화유산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야 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시·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문화유산 제도는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원론적인 동등성과 달리 지정된 문화유산이 지정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정비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겠으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정문화유산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의 경우 비지정문화유산이면서도 사실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지정문화유산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보존조치 유적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데 연 30억 원 내외의 예산만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여 조사와 연구·정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위주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지원 체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지정·비지정문화유산을 구분하지 않고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지정문화유산들은 「문화재보

호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지정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기본계획에 천명되어 있다(문화재청, 2022a). 이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법」이 향후 자리 잡아 간다면, 그동안 소외되고 방치되다시피 하였던 비지정문화유산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비지정문화유산이면서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성격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을 설정한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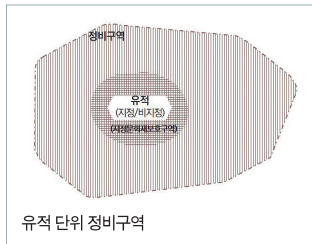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 위주의 정책

「문화재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제1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 5항). 즉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바깥의 일정한 범위도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보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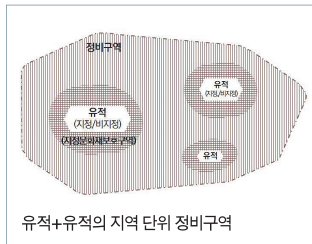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해당 문화유산과 그 주변 일정 범위**를 ‘정비구역’으로 신청·지정 받는 것(제14조 1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는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방향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일부 제약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이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해 전술한 것과 같이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를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그 기본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비구역은 해당 문화유산과 도시 경관이 어울리도록 정비를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이를 통해 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중 원형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지보존’ 조치된 유적의 경우 당초 의도하였던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등 현실적으로는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법적 보호는 물론 예산이 투입되기도 어려워 관리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국가 지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와 결부된다고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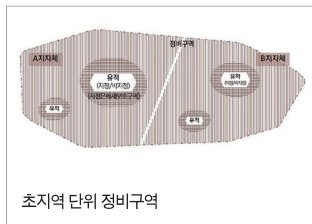
** ‘정비구역’은 문화유산과 그 외부의 일정 공간을 묶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문화유산 외부의 공간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적 단위 정비구역



유적+유적의 지역 단위 정비구역



초지역 단위 정비구역

유적 정비구역 설정 모식도

출처: 한국고고학회(2022)

과 같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 위주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으로서, 「문화재보호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적(面的)이고 공간적인 관리·정비·활용 체계로 전환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에서는 대개 해당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정비도 그 문화유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해당 문화유산 외부 공간(정비구역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계획대로 다양한 형태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비의 토대가 되는 정비구역 설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한국고고학회, 2022). 첫 번째는 ‘유적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개별 유적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적+유적이 복합되는 지역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단위 유적 중심의 정비구역 설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 내에서 유사한 성격 혹은 시기의 유적을 선정하여 두 개 이상의 유적들이 복합된 구역이다. 세 번째는 ‘초(超)지역 단위 정비구역’으로서,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어 복수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시기의 유적 가운데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복수의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을 넘는 초지역 단위로 정비구역을 설정해야 유적의 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지역 간 연계와 활용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그 구역 내를 조화롭게 꾸밈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세 가지 형태의 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포괄하고 있다. 즉 기존의 문화유산 정비가 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화유산과 그 주변 공간을 포괄하여 넓고 다양한 ‘정비구역’ 설정을 통해 문화유산과 주변 공간환경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개별 유적 단위의 점적(點的) 정비에서 면적(面的)·공간적 관리와 정비·활용 체계로의 일대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역사가 뒷받침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역사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개념의 문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 1항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의 ‘고유한 정체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전적 의미처럼 ‘고정불변의 본래적 특징(정체성)’으로 이해할 경우, 마치 원시(原始) 내지 고대(古代) 이후 지금까지 각 권역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의에서 ‘형성·발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화유산’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동일 권역 내의 문화유산이라 하여도 문화유산을 창출한 주제에 따라 또는 그 문화의 갈래에 따라 다양한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유한 정체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으로 이해해야 하며, ‘각 권역의 특징’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 성격의 문화를 종합적이고 구성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는 표현인 ‘고유한 정체성’은 삭제하고 ‘특징적인 역사적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대 시기’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설정 시기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설정의 기본 단위로서 정치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국가나 지역 단위’라는 표현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학술적으로 부적합하고 시간적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명칭에서 시대를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고려하면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2조 1항을 “역사문화권이란 고대 시기에 각 국가나 지역 단위로 유형·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생산·축적하며 특징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온 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제2조 2항을 “역사문화환경이란 역

사문화권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권의 설정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도 않고 복잡적이면서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역사문화권의 공간들을 시·도 단위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그 주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빠져 있어, 문화권별 지역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문화권별 지역을 역사적 실상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역사문화권의 복합적·다층적 성격

구분	문화	정치체	국경(영역국가)	성격
고구려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백제역사문화권	○	○	○	복합성
신라역사문화권	○	○	○	복합성
가야역사문화권	○	○		복합성
후백제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마한역사문화권	○	○ ⇒ ×		복합성
탐라역사문화권	○	× ⇒ ○		복합성
중원역사문화권	○			지역성
예맥역사문화권	○			종족성

한편 마한문화권과 대비되는 같은 시기의 진변한문화권이 빠져 있는 등 문화권 설정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역사적 실상에 맞게 고조선문화권, 예맥·부여·고구려문화권, 마한·백제문화권, 진한·신라문화권, 변한·가야문화권, 주호·탐라문화권, 발해문화권, 통일신라문화권, 후삼국문화권 등으로 구분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노중국, 2023).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 2022년 11월 11일에 한국고고학회 주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역사문화권의 가치·개념 및 시공간범위연구 3차 학술포럼’ 토론 석상에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재범 소장이 역사문화권에 각 지역을 삽입하는 것의 당위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역사문화권 정의에 대해 역사성과 학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비구역 용어의 문제

전술한 것과 같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제3장(제14~23조)에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작성 등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있으며, 정비구역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왜 지정하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 법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관계없이 고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유산을 핵심소재로 하여 그 주변 공간을 문화유산과 어울리게 가꾸고 꾸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그 공간을 찾게 하려고 제정되었다. 한마디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가꿈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정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는 그리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해당 주민들에게는 무언가 강제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불식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바, ‘문화유산 향유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대체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2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 최종 보고 자료.
- 2 노중국. (2023).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의의, 고대 삼국 경합의 중심지 중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5-16.
- 3 문화재청. (2022a).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
- 4 문화재청. (2022b).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가이드.
- 5 성경용. (2023). 역사문화권의 주용 내용과 ‘역사문화권정비법’ 안착을 위한 과제, 고대 삼국 경합의 중심지 중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17-32.
- 6 한국고고학회. (2022). 역사문화권의 가치 및 개념과 시공간 범위 연구 보고서.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군 역사문화유산 활용 현황과 과제

조신규
함안군 문화유산관광담당관
가야사담당 학예연구사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함안군은 아라가야의 고도로 알려진 곳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 는 아라가야의 전신인 안야국을 변한을 대표하는 나라로 안야축지(安邪 蹴支)라 높여 부르고 있었으며, 우리 기록인 <삼국사기> 지리지 함안군 조에서는 법흥왕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랑국(阿尸良國) 또는 아 나가야(阿那加耶)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오가야조(五伽倻條)에서는 아라(阿羅) 또는 아야(阿耶)가 야를 지금의 함안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려사>에서도 ‘본래 아시 랑국(또는 아나가야라 한다)으로 신라 법흥왕이 멸망시키고 군(郡)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아시랑국(아나 가야)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을 반증하듯 함안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야유 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가야의 종주국으로 인식되어 온 김해나 대가야의 고지로 잘 알려진 고령보다 많은 것으로, 가야의 초기부터 멸망 의 순간까지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존재했던 아라가야의 위상을 잘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유적의 지정 면적에 있어서도 150만 제곱미터에 달하여 가야문화권은 물론 국내 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아라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에 따라 그 영역을 살펴보면 함안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남강과 낙동강을 경계로 하고 서쪽



아라가야 유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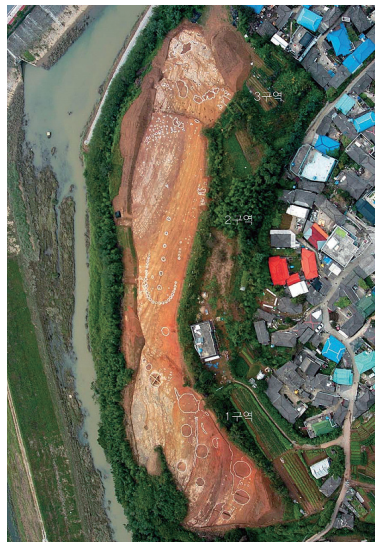
으로는 의령과 진주의 동부지역, 남쪽으로는 진동만과 마산만, 동쪽으로는 창원의 서쪽 지역까지를 그 영역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근거로는 아라가야 양식 토기와 고분양식을 들 수 있는데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가야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변으로 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함안군 내에서 가야유적은 가야읍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군북면과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원읍을 중심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 간에는 유적의 규모와 출토유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라가야 당시 중심지인 국읍과 소읍의 차이로 알 수 있다.

아라가야의 국읍으로 볼 수 있는 가야읍 일원은 아라가야 왕성지로 알려진 가야리유적(국가사적)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 최대 규모의 고분인 말리산고분군(세계유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야의 건물지로는 최대인 당산유적(원형보존)과 가야리 제방유적(원형보존)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왕고분군, 필동고분군, 덕전고분군 등 중형고분군들이 왕성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산산성과 동지산성, 문암산성 등이 왕성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말리산고분군 남쪽으로 500미터 지점의 해발 139미터의 조남산 정상부에는 6세기 중엽 아라가야를 멸망시킨 신라가 쌓은 성산산성이 가야읍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어 국읍의 멸망과 쇠퇴의 모습까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야읍 북쪽의 묘사리와 법수면 일원에는 4~5세기 아라가야의 토기생산 유적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2개소의 토기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5개소가 발굴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남강과 접하고 있는 황사리와 윤내리, 윤외리 일원에는 저평한 구릉지에 소형고분이 확인된다. 아라가야의 동쪽 국경지대라 할 수 있는 칠원읍과 칠서면, 칠북면 일원에서는 오탁리 유적, 여우실 유적, 신산고분군 등 4~6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대규모 고분유적과 더불어 안곡산성(경상남도 기념물), 칠원산성(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이 5세기 후반부터 군사적 요충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쪽의 군북면 일원에는 수곡고분군과 소포리 가야취락유적 등 중소형 고분과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다. 남쪽으로는 여항면이 진동만으로 이르는 진동천과 연결하고 있어 바다로의 원활한 접근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함안군은 고대 아라가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들이 위치하며 중심지와 주변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문헌기록에서 전하는 아라가야의 고도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산유적 발굴조사 현장



말이산고분군 전경(상), 법수산 우거리 토기가마(하)

아라가야 역사문화자원 공간의 특징

경전선 개통으로 시작된 도시화의 시작

아라가야가 멸망한 이후 중심공간의 변화에 따라 약 1,400여 년간 아라가야 핵심유적이 위치한 가야읍 일원은 완전한 외곽농경지로서 이용된다. <함주지>에서는 이 지역이 저습지로 경작지가 많지 않았고 양반이 살지 않았으며 오키나와에서 현상한 물소를 키우는 방목(放牧)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군청소재지인 가야읍이 중심지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23년 경전선 철로의 개통으로 시작된다. 일제의 경전선 철로 개설로 말 이산고분군 동구릉의 능선 북쪽 지역 일부가 단절되었으며 고분군 동쪽 600미터 지점에 함안역이 설치됨에 따라 역 주변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상권은 점차 발달하여 1926년 가야시장 설치가 승인되었으며 우선적으로 함안역과 말이산고분군 사이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가 등이 들어서며 등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말이산고분군 동구릉의 북쪽 구릉지를 중심으로 본동마을과 원동마을, 당산동, 충무동, 중앙동이 형성되었으며 고분군 능선자락에 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농경지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리 앞으로 흐르던 신음천의 하로(河路)를 동쪽으로 틀어 함안천과 연결하며 가야리유적과 당산유적 주변의 경관이 변화하게 된다.

1954년 군청 이전과 도시화의 가속화

한국전쟁 동안 격전지가 된 함안은 기존 성산산성 남쪽 함안면에 소재하고 있던 군청이 피폭됨에 따라 전쟁의 피해가 덜한 가야읍으로 군청을 이전하게 된다. 1954년 함안군청이 현재 함안 선관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들이 가야읍에 위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야읍 시가지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1979년 가야면은 가야읍으로 승격된다.

1981년 잦은 홍수로 군청이 침수되자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쪽의 고지대인 말이산고분군 자락으로 1983년 이전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함안대로 주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1992년 말이산고분군 북쪽에 연접하여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빌라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말이산고분군 동구릉과 서구릉 사이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거단지가 형성되며, 점차 말이산고분군 너머 서쪽지역으로 시가지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개별유적 경관에서 복합유적 경관으로

이러한 도시공간의 확장 속에 아라가야 문화유적의 공간적 확장도 계속되었다. 1963년 말이산고분군 동구릉에 해당하는 도항리, 말산리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남쪽의 성산산성 역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00년에 말이산고분군 서구릉에 해당되는 남문외고분군이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며 유적공간이 가야리와 신음리로 확대된다. 2004년에는 충의공원 건립과정에서 당산유적이 발견되어 원형보존 조치되었으며, 2008년과 2011년에는 가야리 제방유적이 발굴되어 원형보존 조치되었다.

2018년 아라가야 왕궁지로 추정되던 가야리유적의 발견은 복합유적 경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전까지 유적의 경관보호는 말이산고분군 앞의 고층아파트와 같이 단일 유적의 경관 보호 차원에서 고민되어 왔다. 그러나 가야리유적의 조사성과에 따라 이곳이 아라가야의 왕성(王城)임이 확인되자 왕성을 중심으로 왕릉과 산성, 정전 등 주변 유적과의 역사적 연계성과 가시성(可視性) 보호라는 복합유적 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점 단위의 유적관리에서 유적간 역사적 연계성을 가진 면 단위의 유적관리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남문외고분군의 발굴조사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말이산고분군으로의 사적 승격이 이루어지며 가야읍 내부의 유적 간의 연계성은 경관적 측면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함안군에서는 가야리유적에서부터 성산산성에 이르는 면 단위 유적공간, 즉 아라가야 왕도(王都)라 할 수 있는 이곳의 역사적 경관 보호를 위해 통합적 역사문화환경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아라가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역사도시

역사유적은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증거라는 점과 역사적 진정성을 담은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인문지리환경의 결정체이자 랜드마크(Landmark)라는 공간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공간적 가치는 해당 지역만이 가진 타 지역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독점적 문화콘텐츠라는 중요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유적은 지역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사성, 경관성 보호를 위한 유적 주변 지역의 규제로 인해 전통적 개발에 있어 걸림돌로도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적 성장을 강조한 하드파워(Hard Power)에서 지역의 인문지리적 자원의 활용과 조화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전환되며 역사유적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 재생 및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역시 이전의 원칙적 보존에서 합리적 보존으로 변화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발전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 면적만 약 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야읍을 가진 함안군은 아라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가야읍 전체 면적 41제곱킬로미터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2제곱킬로미터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8.1제곱킬로미터다. 이들 면적을 합하면 전체 가야읍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으로, 더구나 이들 유적공간이 가야읍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적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함안군의 군계획시설 역시 유적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가야읍 소재 유적 현황

유적명	지정구분	위치	면적(m ²)
가야리유적	사적	가야읍 가야리	195,008
말이산고분군	사적	가야읍 도항리·말산리·가야리·신음리	783,620
성산산성	사적	가야읍 광정리	227,821
가야리 제방유적	원형보존	가야읍 가야리	10,462
당산유적	원형보존	가야읍 도항리	3,300
계			1,220,211

현재 말이산고분군 동구릉과 인접한 구 시가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도로의 협소로 도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역사유적과 연접하고 있어 재건축 및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야읍 시가지의 범위가 점차 말이산고분군 동구릉과 서구릉 사이의 택지개발구역 내로 파고들며 아라가야 왕도의 경관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야읍 일원에 위치한 아라가야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도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차별성과 더불어 도시공간적 매력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경관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그동안 대립적 구도 속에 정체된 가야읍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라가야 역사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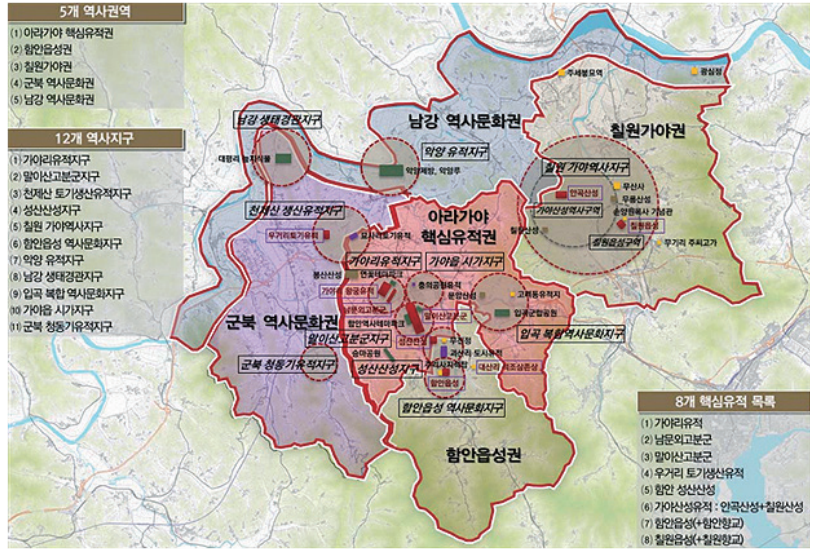
역사도시 조성의 방법들

함안군에서는 역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사진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목적은 함안이 가진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도시에 투영하여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적 수법(유적정비 및 관리)과 계획적 수법(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등), 사업적 수법(기반시설 조성 등)을 수반한다.

마스터플랜의 수립

마스터플랜에서는 우선적으로 함안군 전 지역에 대한 인문지리적 환경, 역사유적,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라가야 핵심유적권(가야읍, 산이면), 함안읍성권(함안면, 여항면), 칠원가야권(칠원읍, 칠서면, 칠북면), 군북역사문화권(군북면, 법수면), 남강 역사문화권(대산면, 남강/낙동강 연안구역)의 5개 권역을 구분하였다. 이후 각 권역별 역사정체성의 중심지를 핵심지구로 선정하여 지구별 주요사업을 발굴하였다.

다음으로 5개 권역별 유적의 입지를 분석하여 역사골격과 축선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맞춘 도로정비 및 기반시설,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함안 역사도시 5대 권역

아라가야 역사도시 마스터플랜 비전

비전	'가야문화권 중심도시, 아라가야 함안'으로		
목표	미래천년 가야 역사문화 창조도시, 함안		
	세부목표 하나.	세부목표 둘.	세부목표 셋.
	역사문화유산 가치 정립	역사도시 함안의 정체성 확립	함안역사문화의 미래자산화
	아라가야 왕도 함안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 육성	역사유적, 역사문화환경, 역사골격을 통합한 역사도시 함안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역사문화유산과 역사도시를 토대로 한 함안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구축
전략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 회복 및 미래유산화	아라가야 정원도시, 함안 만들기	가야 문화유산 체계화, 미래유산화 전략사업 추진
	함안 역사도시의 시대성과 장소성 보존, 회복	아라가야 왕도, 함안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가야 역사문화와 지역생활문화의 연결가점 조성

또한 각 권역별로 기본구상과 더불어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요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역사도시 조성을 위해 10개의 역사도시 특화사업을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역사도시 기반조성의 대표적 사업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에서 시작된 이 법안은 고대 6개 문화권의 활성화와 유적이 위치한 주변의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제정되었다. 2021년 6월 법이 시행되었으며 2022년 4월 문화재청에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2023년 3월 문화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지난 6월 함안과 나주, 해남, 강릉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후 현재 정비시행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함안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미산고분군 일원을 중심으로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구상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기본개념은 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문화재청장, 실시계획인가는 시도지사로 되어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사업의 형태에 따라 별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박물관, 전시관,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용도구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함안군에서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용도구역변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향후 계획

현재 함안군에서는 역사도시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및 고도지정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절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물론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함안군의 아라가야 역사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은 기회비용으로 설명된다. 아라가야 600년 역사의 중심 가야읍에는 아라가야 왕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이 왕도의 모습은 가야문화권은 물론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다른 고도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면적의 22%, 시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되어 역사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안군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역사문화유산과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요구를 거절하고 일반적인 개발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함안뿐만이 아닌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어느 선택의 기회비용이 큰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아라가야 역사도시의 염원은 오래되었다. 1960년대 신문수필과 연재 등으로 말이산고분군 등 아라가야의 고적을 소개하며 이를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민선 자치정부가 들어서며 아라가야 복원은 대표적 공약사업의 하나였다. 이러한 염원이 지난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구체화가 되었고 그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제정과 고도법의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얼마큼 도약하는 가는 함안군과 군민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생각된다. 함안의 도심 속 어느 곳에서도 아라가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1). 함안 우거리 토기가마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3). 함안 가야리유적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3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3). 함안 안곡산성. 함안군.
- 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함안군.
- 5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일엔지니어링. (2020).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마스터플랜. 함안군.
- 6 조신규. (2021). 최신평가 성과를 통해 본 아라가야의 재인식. 가야사의 제문제. 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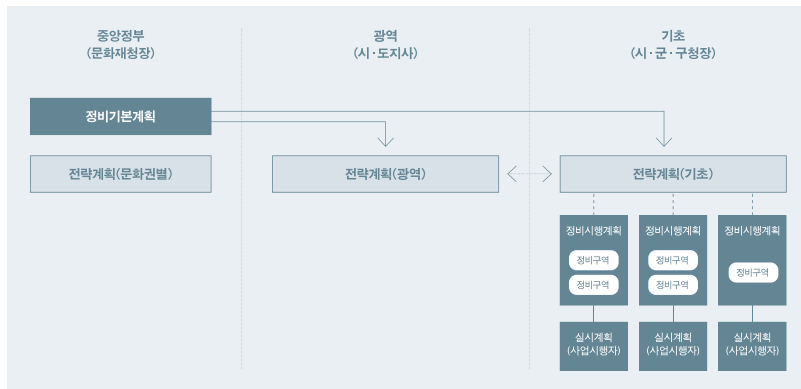
역사문화권 계획체계의 이해와 시행계획 수립 방향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역사문화권 시행체계 및 계획체계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22년 4월 ‘제1차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국가(문화재청장)가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역사문화권의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적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 새롭게 정의된 개념 및 계획체계에 대한 정립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타법과의 관계나 정비구역 운영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정책 시행 초기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본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이하 계획수립 가이드)를 함께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계획수립 가이드에서는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과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수립하는 시행계획 외에 비법정계획으로 문화권별 ‘전략계획’과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전략계획’을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계획체계

출처: 문화재청(2022,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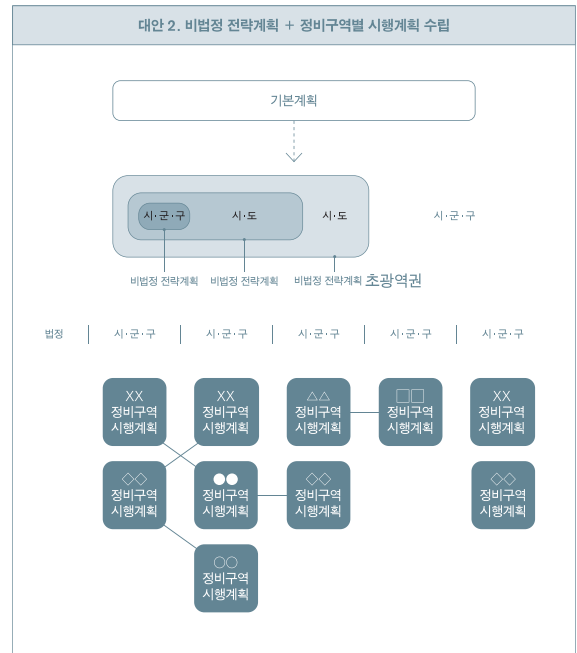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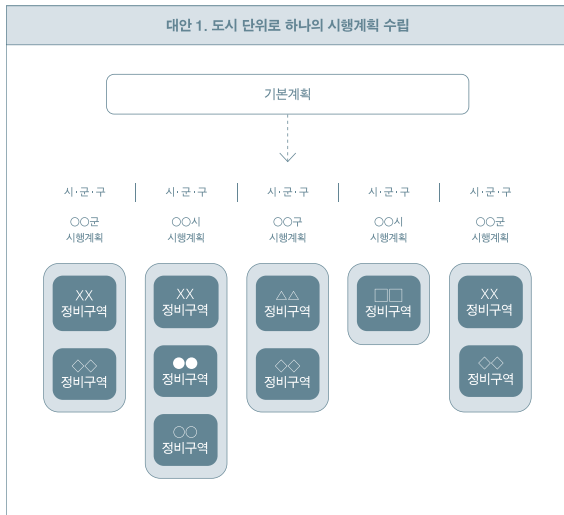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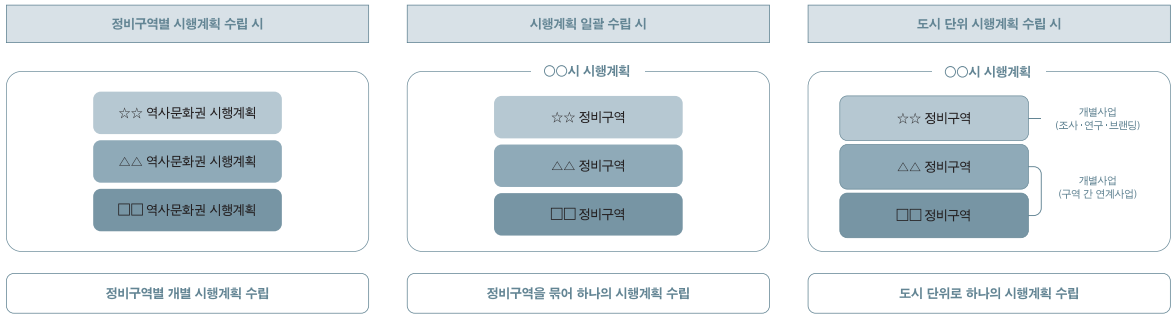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과 주요 내용,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과 목적

역사문화권에서 전략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현재 역사문화권의 계획체계에서는 도시 단위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체계가 부재하다는 점과 시행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먼저 도시공간 정비를 중점으로 하는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도시 및 광역 단위의 거시적인 계획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할지역 단위에서 후보지 또는 예정구역을 설정하는 계획이 존재하는 이원적 계획체계를 갖고 있다. 한편 문화재, 고도, 세계유산 등은 역사문화권과 달리 계획대상과 구역이 명확하여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여건이 상이하다.



다음으로 시행계획의 위상과 역할 측면이다. 법 규정에 의하면, 시행계획을 정비구역별로 수립할 것인지, 여러 개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하나의 기초지자체가 하나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위상과 역할, 추진방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비구역은 법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될 수 있고,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한정적인 예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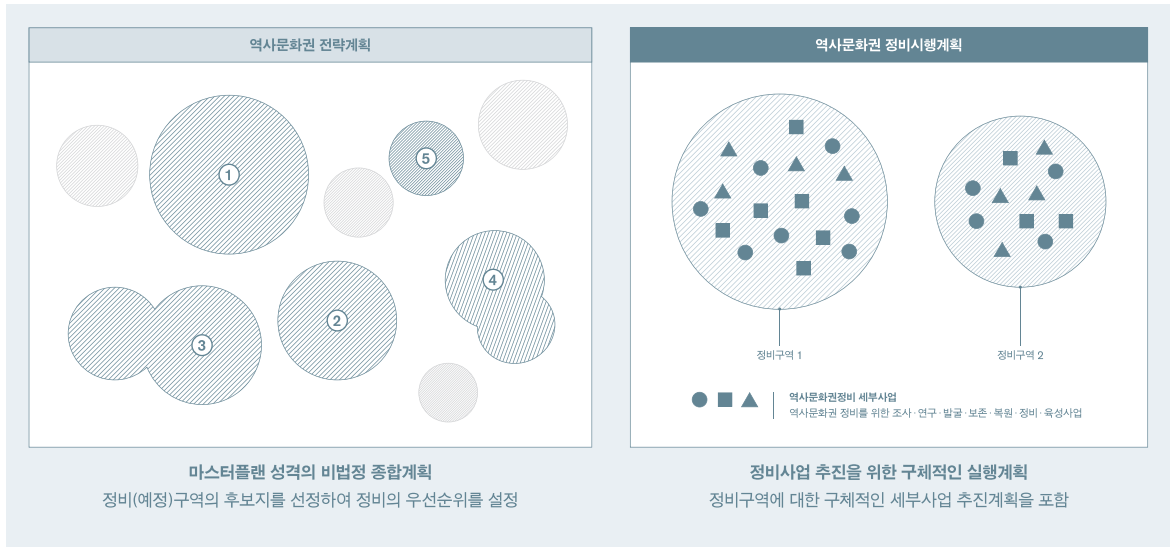
여러 개의 정비구역을 동시에 지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시행계획은 옆의 그림의 대안 2와 같이 정비구역별로 수립하여 해당 정비구역에서 추진할 정비사업과 실행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파편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

기초지자체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구역 간의 연계나 관계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계획체계이다.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는 전략계획은 ①해당 지자체 내에 한 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비가 필요할 경우, ③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게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특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략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관할 지역 내 정비구역으로 설정한 필요가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해 지자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여건을 파악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의 해당 역사문화권의 개략적인 시·공간적 범위와 역사문화권의 가치 및 특성,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동일 역사문화권에 해당되는 구역이나 인접한 유산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포함할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정비구역 후보지별로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구역별 역사문화권과 관련한 현황과 여건, 현안분석과 함께 후보지별 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정비구역 간의 관계와 연계성을 토대로 한다. 셋째, 정비구역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단위의 시행계획 차원에서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권 진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전략사업을 담는다.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성격과 정비시행계획과의 관계

전략계획에서의 정비구역 후보지 범위 설정

전략계획에서의 정비구역의 설정은 각 구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지 단위까지의 경계는 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고대유산의 중첩성과 복합성을 고려하고, 구역 간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범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시행계획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시행계획의 내용과 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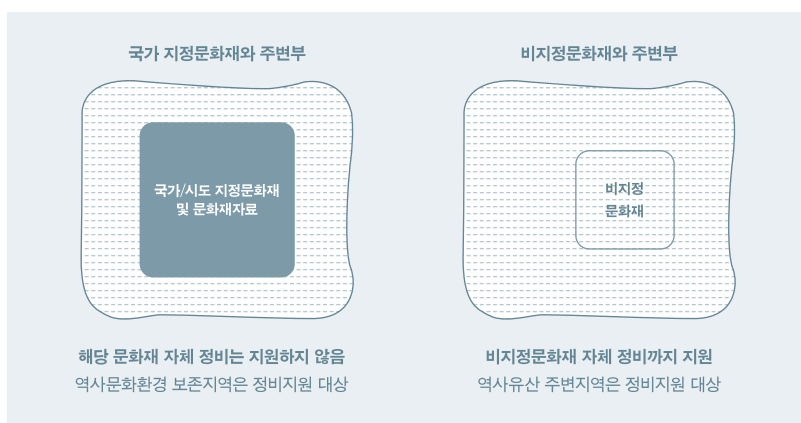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구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계획내용은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요한 핵심 내용은 정비구역의 설정과 정비사업의 구상으로 수렴된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과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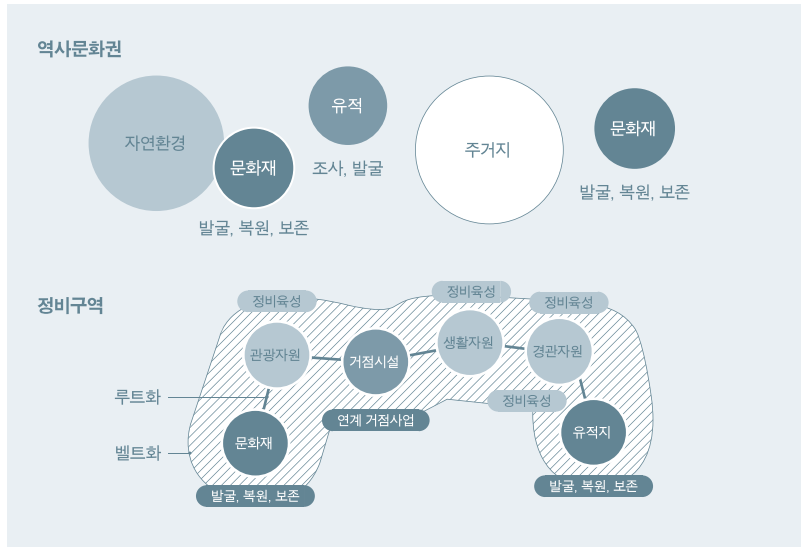
정비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은 관련 지구·구역과의 중복지정 여부, 정비사업과의 관계, 정비구역 설정기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정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이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지구·구역과의 중복지정 여부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고도지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정비구역 내 건축 등의 행위제한에 대해 위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구역들과 중첩될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규제는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과의 관계이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육성하는 사업으로, 물리적 조치가 필요한 하드웨어 사업과 교육·연구·브랜드·인력양성 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특정 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 기존 가이드에서는 하드웨어 사업에 한해 명확한 대상지 위치 및 공간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권 정비구역과 정비사업과의 관계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개념도

역사탐방로나 트레일 조성 등과 같이 선적인 사업이나 유적발굴사업도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시 된다. 두 경우 모두 정비구역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유적발굴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행위규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비구역의 설정기준 측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면적기준의 제시, 지정요건의 제시, 경계설정의 기준 제시 등이다. 기존 가이드에서는 정비구역 설정 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말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가이드에서는 명확한 정량적 수치나 포함되어야 할 요소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쟁점과 연계된다.

먼저 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은 일정한 범위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4개 지역의 정비구역(안) 면적을 살펴보면, 일정한 면적범위 내에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구역 내에 사적의 포함 여부, 발굴조사사업을 위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필요한 지역의 정비구역 설정을 제약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구역 설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내용을 제시해주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특히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유산 전반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해당 역사문화권 시기에 부합하는 역사자원만을 정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비구역 내 복합되고 중첩된 유산과 다양한 시기의 역사자산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 연계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 시 유의사항

이러한 점에서 정비구역 설정의 지정요건을 한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구역 설정 시 지양하고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비구역 설정할 때 지양해야 할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발굴조사만을 위한 정비구역 설정은 지양할 것, ②개별 유산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은 지양할 것, ③역사문화권역의 명칭에 집착하여 특정 문화권 유적만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지 말 것, ④고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기의 역사문화유산 및 지역자원과 유기적인 활용가능성과 연계를 고려할 것, ⑤행위제한을 고려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정할 것 등이다.

또한 단일 유적만을 중심으로 설정한다거나 단일 지자체 내로 한정하여 설정하지 않아도 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단일유적 외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유적과 주변지역 일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인접 지자체에 성격이 동일하거나 관련 유적이 인접 분포하는 경우 하나의 정비구역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수 있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먼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비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둘째로 고도로 국한되었던 역사문화환경의 면 단위 정비와 활용가치를 ‘역사도시’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셋째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규제와 보존 위주에서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하고 활용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심경미 외, 2022, p.8).

법률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는 제1차 역사문화권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마한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강원도,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으며, 총 1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처럼 역사문화권 정책 추진의 전국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역사문화권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계획체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법정계획으로 제안된 문화권별 전략계획과 광역지자체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 수립주체와 주요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지자체의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정비구역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의 형태가 점-선-면적 모두 해당되도록 규정할 것인지, 면단위 구역 설정을 기본으로 그 밖에 연계 추진되는 일부 사업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밖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줄 것인지 혹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이 구상되는 탐방로 조성 사업과 같은 선적 사업에 대해 선 단위 정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설정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 이상의 지자체 간 협력체계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도할 수단과 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행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특·광역시외의 경우, 구청장이 아

닌 특·광역시장이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은 고도와 달리 특정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기존 정책과는 매우 다른 체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행계획은 국가가 승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국가 예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기초지자체는 국가의 선도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 발굴하고 승인받은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부처 지원사업 연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취지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심사·승인하고, 지자체들의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마중물 차원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 2 문화재청, (2022),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4월 12일 보도자료.
- 3 심경미, 정인아, 김종범, (2022),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이해와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auri brief No.238, 건축공간연구원.
-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 2022.1.11. 타법개정.
- 5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청 고시 제2022-40호, 2022.4.12.

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방향

김종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2020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앞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법률과 달리 당시 법안은 개별 문화권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문화권에 해당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정책 여건을 다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202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이다. 가야고분군은 경북·경남·전북에 걸쳐 있으며, 등재를 위해 고분군이 위치한 지방정부와 문화재청은 초광역적인 추진체계를 꾸렸다. 다른 예로는 2017년 수립된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이 있다. 전라남도가 마한사 인식 확대를 위한 사업을 꾸린 계획으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과 조례를 통한 근거 확보, 단계별 재정계획과 추진 일정 등이 적혀있다.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2023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이 추진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에 앞서 문화유산과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의 밑그림은 수년전부터 그려졌고 볼 수 있다. 아래 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한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1),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2022),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23)를 통해 살펴본 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의 정책동향과 여건, 정비사업의 접근법을 소개한다.

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 정책동향과 여건

역사문화권 정비는 그 공간적 배경을 법률에 따라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자연환경과 무형유산도 역사문화권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에 포함하고 있으나, 고대 역사문화의 정체성은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은 실제로 발견되는 장소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고고 유적이 역사문화권 정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에 근거하여 고고 유적이 보호되고 발굴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고 유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절차에 따라 보호되었거나,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에서 구제발굴(救濟發掘, rescue excavation)되어 유적의 가치를 남기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구제발굴된 유적은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거나 비지정문화재인 상태로 발견된 장소에 존치하거나 기록한 후 파괴되는 절차를 거쳤다. 2023년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구상하는 정비의 공간은 이 두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고고 유적이 포함되어있다. 역사문화권 정비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땅 위에서 공간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파괴라는 고고 유적의 관리 방식에 ‘정비’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자체 정책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던 고고 유적의 대표 격인 사적과 기념물,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관리되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근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도모의 공간과 얼마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지난 3년간의 연구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여 정책동향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사적 북암리고분군
출처: 나주시 제공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출처: 문화재청

나주의 북암리 고분군과 주변 지역

나주 북암리 고분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조사를 통해 4세기 돌무덤, 6세기 말~7세기 초 굴식돌방무덤이 발견되었다. 현재는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유적은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과 백제세력의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이다. 현재 역사문화권 정책 추진에서는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을 마한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나주시는 1998년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7년 국립나주박물관 유치, 2009년 나주 북암리 고분 전시관 건립 추진 등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규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2년에는 '나주 마한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역사문화권 전략계획과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여건 속에서 나주시는 영산강 북측에 위치한 북암리 고분군, 남측에 위치한 반남 고분군, 두 고분군 사이의 오랑동 요지를 연결하는 반경 5킬로미터 내의 문화유산과 지역을 연계하는 정비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북암리 고분군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 주변에 일부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 존재하는 양상으로, 상주인구가 적고 나주역 등 지역 중심공간과도 다소 떨어져 있다. 나주의 역사문화권 정비는 농촌 환경에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지에 대한 과업이라 판단된다.

연천의 호로그루와 주변 지역

연천은 고구려역사문화권의 대표 지역이다. 연천군은 고구려의 방어체계인 호로그루·은대리성·당포성을 '고구려 3대성'으로 이름 붙이고, 조사·연구·보호·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2008년부터 '연천 고구려 3대성에 대한 유적정비계획'을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천이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 고구려 문화유적 보수·보존 정비사업'을 실시(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p.85)하여, 사적, 기념물의 관리와 비지정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적 호로그루는 1991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 과정 중, 2014년부터 주민자치



연천의 호로그루와 주변 지역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
출처: 연천군 제공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나주 북암리 고분군.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천군·LH·인근 군부대가 함께 유적 인근 유희지 약 3만 제곱미터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하여 유적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호로고루는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샛강에 의해 삼각형으로 생긴 현무암 절벽 위에 성이 자리하고 있어, 빼어난 자연 경관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잦다.

연천군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호로고루 또한 정비구역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상 중이다. 호로고루 주변 지역 발굴조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임진강과 현무암 지형으로 대표되는 지질환경, 유적 북편에 위치한 자작리와 원당리와 관계 설정이 관건인 지역이다. 연천군은 은대리성 권역과 비지정 유적인 무등리 보루군 권역도 정비구역으로 구상 중이다. 은대리성 일원에는 한탄강 철교와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무등리 보루군은 먼 소재 문화체육센터, 평화누리길, 주변 캠핑장 등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지
출처: 문화재청(2017)



봉황동에서 발굴된 가형토기
출처: 문화재청(2019)

김해의 봉황동 유적과 주변 지역

김해 봉황동 유적은 1963년 1월 12일 사적 2호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유적이다. 유적이 가진 중요도만큼이나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정책적 지원도 타 가야역사문화권 지역에 비해 큰 편이었다. 1998년부터 문화재청은 제2차 문화권사업에 김해를 포함하고 2003년에는 ‘가야역사환경정비사업’으로 이관하여 유적의 가치를 규명하고 정비하였다. 2019년부터는 국정과제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추진, 김해를 포함하여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유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현재도 김해지역 가야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공간이 봉황동 일원이다.

봉황동 유적은 김해여객터미널, 부산김해선 봉황역, 백화점, 시장이 인접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2015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상·부원·회현동 원도심 재생사업 부지도 여기에 속한다. 유적이 도시와 밀접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는 필수적으로 발굴조사를 겸하여야 한다. 봉황동 유적 주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보존조치된 비지정 유적도 5기에 이른다. 봉황동 유적의 남측은 최근에 ‘봉리단길’로 불리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개발이 지속될수록 사적 주변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호조치도 예상된다. 김해시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이

다. 봉황동 유적은 인접한 사적 김해수로왕릉,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도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는 ‘역사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춘 유적이다. 현재의 도시와 역사적 공간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auri



강릉 초당동

©auri



강릉 1호석곽 금귀걸이

강릉의 초당동 유적과 주변 지역

강릉 초당동 유적은 4~6세기 신라가 강릉지역에 자리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초당동 일대는 신라 이전, 선사 이래 마을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의 오래된 취락이다. 초당동 유적은 한반도의 고대인의 삶의 공간이 삼국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특성 탓에 초당동 유적은 강릉고등학교의 부지에 면하는 길쭉한 형태의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초당동 유적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학교 부지 내에 간이 유적 전시관도 설치되어 있다. 초당동 유적부터 북측의 명승 경포대에 이르는 공간에 약 90여 회의 구제발굴이 진행되었을 만큼 다수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강릉의 대표적 관광지인 초당동과 경포대는 조선시대로 대표되는 문화유산의 장소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긴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이다. 강릉시는 현재 경포대 남측부터 초당동 유적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비구역을 구상하는 정비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릉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역사문화권의 양상을 예맥역사문화권부터 신라역사문화권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시간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고대 무형유산인 제천행사의 공간을 회복하는 한편, 예맥과 신라 이미지를 도시에 부여하기 위한 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예맥역사문화권은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강릉의 역사문화권 정비는 고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구명(究明)하는 과정과 함께 관광지라는 공간 특성을 결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해남의 현산면과 제주의 외도동·종달리 지역

해남의 현산면과 제주의 외도동은 고고 유적이 사적이나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고대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의 대상지다.



읍호리 정비구역 일원 고인돌군

출처: 해남군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릉 초당동 유적.



고다산성 북벽 하단 지표수습유물
출처: 해남군 제공



제주 외도동 발굴조사 현장



외도동 출토 유물

해남 현산면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4킬로미터 내에 광범위하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전라남도는 마한역사문화권 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비지정 유적의 발굴조사를 지원했으며, 그 성과로 최근 현산면 일평리와 읍호리 산성에 대한 고대 역사문화권으로서의 가치가 밝혀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23년 마한역사문화권의 중요유적이 묻힌 지역 중 하나로 해남을 선정하고, 국비를 통해 발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일평리와 읍호리 일원의 청동기시대 지석묘부터 마한의 세력권이 점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 백제의 산성으로 비정되는 유적까지를 포함한 정비구역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권 전략계획과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제주의 외도동과 종달리는 2023년 문화재청이 지원한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외도동에서는 고대 집자리와 우물, 종달리에서는 포구유적이 발견되는 성과가 있었다. 탐라역사문화권은 다른 문화권과 달리, 사료로 기록된 바가 현저히 적으며 고고 유적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 이후,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두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외도동은 제주국제공항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2027년 중학교 건립이 예정되는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유적이 보존조치되거나 구제 발굴 후 기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중요유적 발굴조사에서도 다수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사유지에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유적 보호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공간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계획과 정비시행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방향

소개한 지역 외에도,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 일원,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만동유적·태봉토성 일원, 아산 배방산성 일원, 서천 건지산성과 한산읍성 일원,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원, 고령 주산성과 지산동 고분군 일원, 장수 방아재 고개 일원, 전주 동고산성 일원 등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역사문화권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살폈듯, 역사문화권 정비는 지역 여건의 먼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유적 주변이라는 장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각종 행위가 규제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곳이다. 이런 한계를 허물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숙제가 남아 있다. 아래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고려할 점을 소개한다.

정비사업의 장소와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관계를 고려해야

앞서 소개한 지역 중 해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사적과 관계된 지역이다. 사적은 그 의미 자체로 역사적 장소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은 대부분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역사문화권 정비는 지정문화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정문화재가 지정되기까지 필요했던 조사, 연구, 발굴과정은 현재의 문화재 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문화권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정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정문화재의 경계는 행정적인 경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고 유적이 위치하였던 과거의 원 지형과 원 풍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고학에서는 유적의 위치를 비정(比定)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은 즉, 고고 유적이 잠재적으로 위치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장소를 법률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리한다. 사적과 기념물은 이들 유존지역에 당연히 포함되며, 지정된 문화재와 유존지역은 일단의 공간 안에서 ‘연속’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부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포된 유물과 유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은 보호와 활용의 조율이 필요. 지역 여건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정비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은 면밀한 기획에서 비롯할 필요가 있다. 소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고 유적이 위치한 지역적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확산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역사문화권 정비가 기존 문화재 정책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비지정 상태인 고고 유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비지정 유적은 농림지역에 속하거나 임야, 산지에 위치한 경우 또는 도시지역의 개발 행위에서 발견되어 보존된 상태로 크게 나뉜다. 역사문화권 정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그간 추진되었던 보호 일변의 정책과 결을 달리하므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실효적 구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적 조사, 지역 인적자원의 여부, 타 부처 사업 추진상황 등과의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정비의 수준을 가늠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가 기존의 지정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를 비지정문화재로 확대했다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용성에 대한 기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정문화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 정비의 대상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의 영향권에 포함된 지역의 일상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과거 문화재청 주도의 지정문화재 관리 방식의 탈피가 요구된다. 이에 핵심은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문화유산이 규제라는 인식을 그치고, 지역 활성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함께 엮어 나갈지에 대한 종합구상이 필요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법률이고,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정비시행계획은 지역이 역사도시 면모를 구축해나가는 마스터플랜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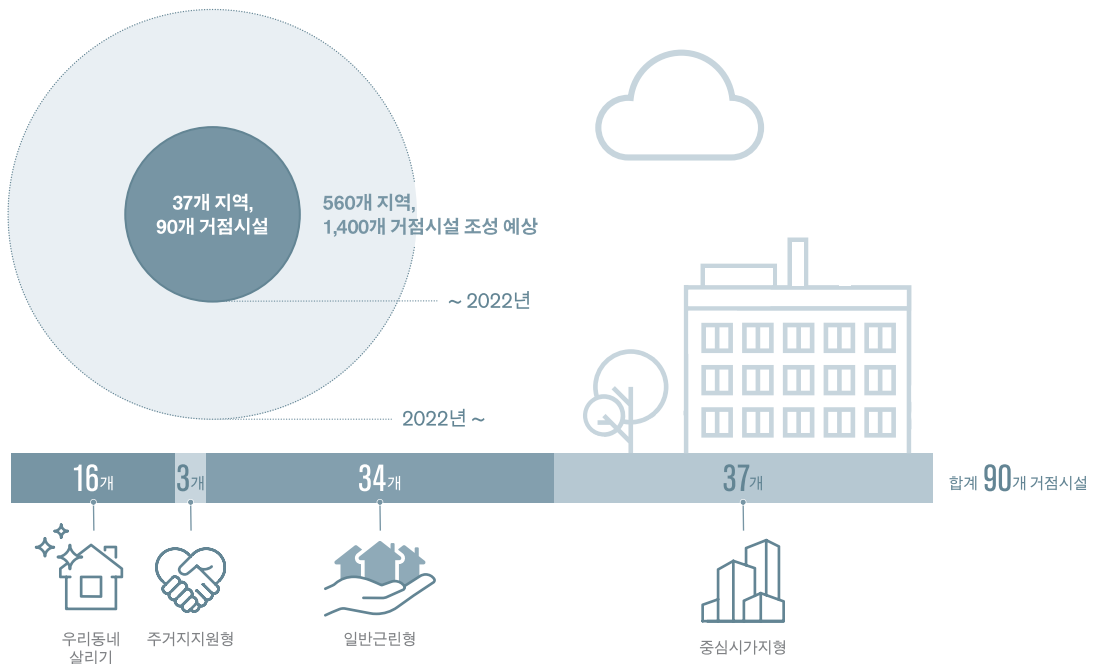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 2 김종범, 심경미, 진태승. (2023).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 4 문화재청. (2017). 금관가야 추정왕궁지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 성과 공개. 11월 21일 보도자료.
- 5 문화재청. (2019). 금관가야 중심권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모양토기와 말발걸이 출토. 1월 9일 보도자료.
- 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은?

건축공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10명, 기초·현장·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546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도시재생 사업지당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몇 개나 조성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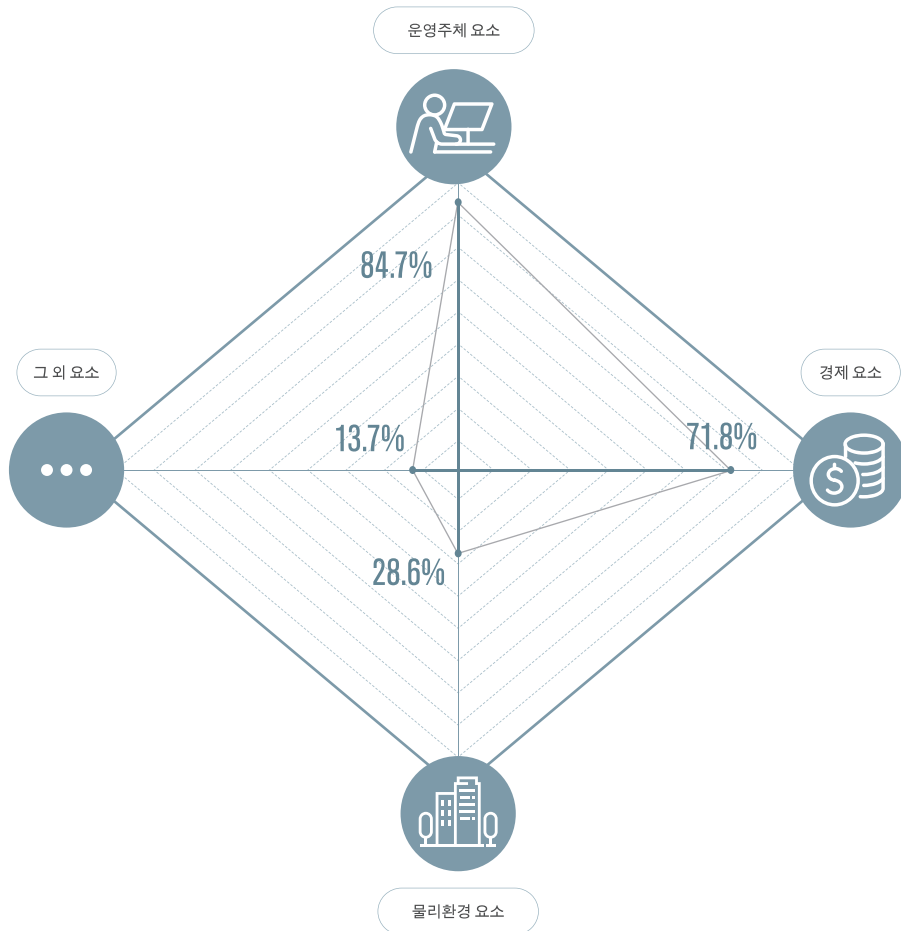
A 사업지당 약 2.5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에 국비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2023년 12월까지 총 560개소에서 추진되었다. 첫 사업 후 9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37개 지역에서 국비지원 사업(마중물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 37개 지역에 90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지당 평균 2.5개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전체 사업 수를 고려할 때 향후 1,400개 이상의 거점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행정·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공급하고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Q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 1순위(필수), 2순위(선택) 종합, 248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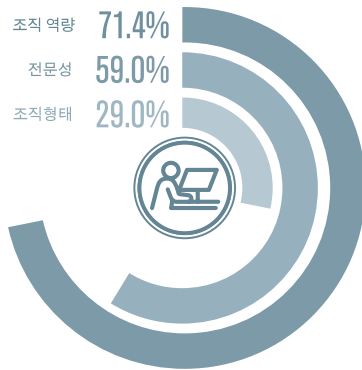
- 운영주체 요소: 조직형태, 조직역량, 전문성, 지역연계, 네트워크 등
- 경제 요소: 사업구조, 운영재원구조, 지역사회 연계구조 등
- 물리환경 요소: 입지, 규모, 운영프로그램, 공간의 질 등
- 그 외 요소: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절차 우수성,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A 운영주체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84.7%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4개 요소(운영주체, 경제, 물리환경, 그 외 요소)를 도출하여, 중요도를 설문하였다.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주체 요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경제 요소, 세 번째는 물리환경 요소, 네 번째는 그 외 요소 순이었다. 거점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와 관련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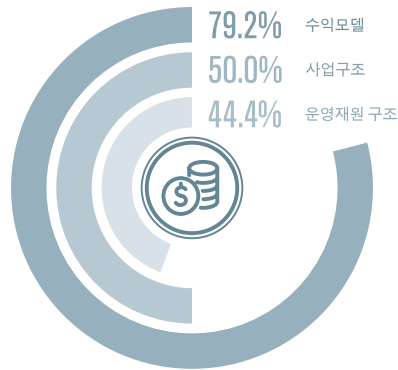
Q 각 요소의 세부 중요 요소는?

(상위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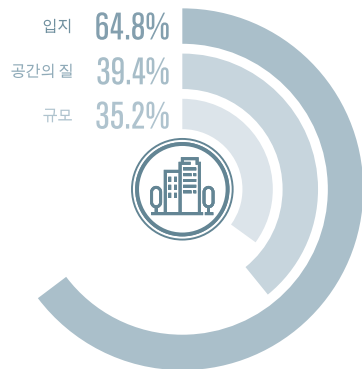
운영주체 요소

* 1순위(필수), 2순위(선택) 총합, 21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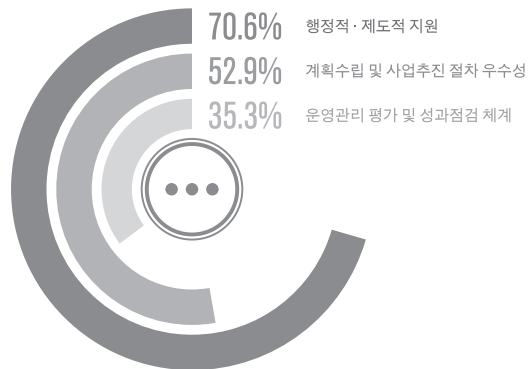
경제 요소

* 1순위(필수), 2순위(선택) 총합, 179명 응답



물리환경 요소

* 1순위(필수), 2순위(선택) 총합, 71명 응답



그 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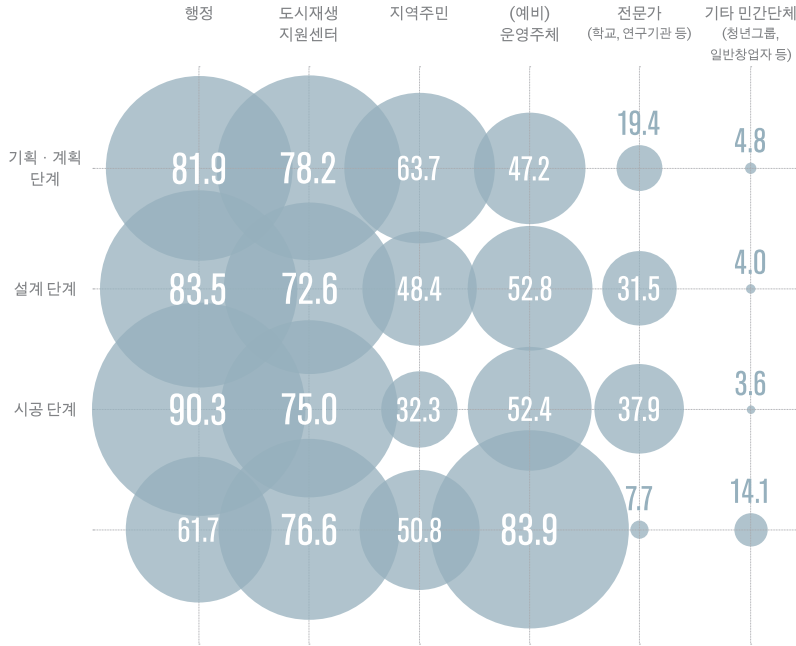
* 1순위(필수), 2순위(선택) 총합, 34명 응답

A 운영주체 요소에서는 조직 역량, 경제 요소에서는 수익모델, 물리환경 요소에서는 입지, 기타 요소로는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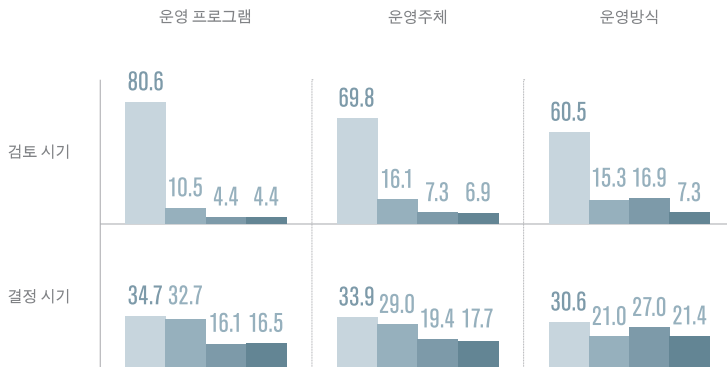
앞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된 운영주체 요소의 세부 요소로는 조직 역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요소에서는 수익모델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물리환경 요소에서는 시설의 입지(64.8%)를, 그 외 요소에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70.6%)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1순위(필수), 2·3순위(선택)
총합, 248명 응답

(단위: %)



■ 기획·계획단계 ■ 설계단계 ■ 시공단계 ■ 준공 이후



- 운영 프로그램: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도입기능 및 내용
- 운영주체: 행정, 공공기관, 민간(주민조직,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주체, 민간기업 등)
- 운영방식: 행정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사용허가, 관리위탁 등)

Q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과정의 참여 주체 중 누가 중요한가?

A 기획·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행정주체가 가장 중요했으며,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주체가 가장 중요

거점시설의 조성 단계별로 어떤 주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지 물은 결과, 거점시설의 기획·계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는 행정이,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주체가 중요한 주체로 꼽혔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성 전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고르고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기타 민간단체는 운영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Q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의 검토·결정을 위한 적정 시기는?

A 시설의 기획·계획 단계부터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거점시설 조성 과정 중 시설 운영과 관련된 항목(운영 프로그램, 운영주체, 운영방식)의 검토 시기는 기획·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운영 프로그램은 응답자의 80.6%가 기획·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운영주체(69.8%)와 운영방식(60.5%)도 기획·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52

Winter 2023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싱가포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시 안의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해 '자연 속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파리시에서는 소위 '친환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해외동향을 통해 공유한다.

국내 동향으로는 우리나라 한옥정책의 흐름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올해 진행 과정과 수상작을 소개한다.

템포니스 파크 커넥터



전동 킥보드 자리를 대신하는 전기자전거 서비스



구미 보세장저장



해외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 자연 속의
도시로 향하는 여정
066

파리의 개인형
이동수단 금지 정책과
도시 친환경
이동수단 정착 방향
073

국내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경과 및
수상작 소개
078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 자연 속의 도시로 향하는 여정 |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 내 자연자원을 보존 및 확장하여 거주자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 녹색계획에서 자연공원 네트워크 확장, 공원과 정원에서의 자연친화적 요소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의 개인형 이동수단 금지 정책과 도시 친환경 이동수단 정착 방향 | 1만 3,084명의 파리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89.03%가 서비스 중단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8월 31일 자정까지 파리 시내에 있는 민간 전동 킥보드 1만 5,000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자리 대부분은 자전거 주차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경과 및 수상작 소개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단순히 한옥에 관심 있는 이들의 작품을 시상하고 홍보하는 이벤트를 넘어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연구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의 보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계속해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 자연 속의 도시로 향하는 여정

최윤경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녹색도시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는 단일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탄소 감축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정원도시나 정원박람회 등 여러 녹지전략 계획과 사업을 구상하여 녹색도시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2023년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통해 서울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23).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한정된 토지와 제한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도시 내 녹지를 확보하고 도시를 녹화하는 노력으로 정원도시를 표방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2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30 녹색계획(Green Plan 203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싱가포르의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슬로건으로 삼았던 ‘자연 속의 도시(City in a Garden)’에서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로 새로운 변모를 꾀하고 있다.

자연 속의 도시를 향한 싱가포르의 전략:

2030 녹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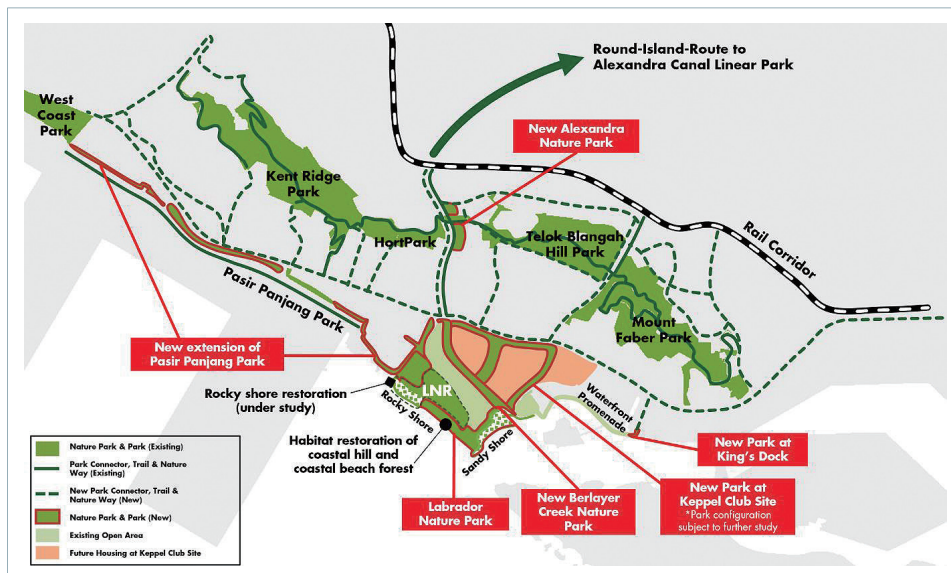
싱가포르 2030 녹색계획은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지속가능환경부(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등 5개의 부처가 함께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①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자연 속의 도시, ②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 재편, ③친환경적 소비와 자원절약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 ④친환경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등의 녹색경제, ⑤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통한 회복력 있는 미래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하여 세부 목표와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①자연 속의 도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녹색도시 및 정원도시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 내 자연자원을 보존 및 확장하여 거주자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 녹색계획에서 자연공원 네트워크 확장, 공원과 정원에서 자연친화적 요소 확대, 도시 내 자연경관 복원, 녹지공간 간 연결성 강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1: 자연공원 네트워크 확장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라질 수 있는 자연보호구역을 보호하고 보완적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형성된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위원회(National Parks Board)는 현재 4개의 자연보



라브라드르 자연공원 네트워크 지도

출처: National Parks Board(2023b).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nature-park-network>



이스트 코스트 파크의 치유정원

출처: National Parks Board(2023c).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therapeutic-gardens>



호트 파크의 치유원에 프로그램 활동

출처: National Parks Board(2023d).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therapeutic-gardens/therapeutic-horticulture-programmes>

호구역과 총 400여 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헥타르의 새로운 자연공원을 추가 공급하여 2020년 대비 자연공원 면적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ational Parks Board, 2023a). 더불어 자연공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생태 연결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2년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자연공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라브라도르 자연공원 네트워크(Labrador Nature Park Network)의 추가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기존 6개의 공원과 함께 4개의 신규 공원 및 라브라도르 자연보호구역을 추가 조성하여 총 200헥타르가 넘는 녹지공간을 거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Ng, 2022).

전략2: 공원과 정원의 자연친화적 요소 확대

녹지의 질적 측면을 향상하기 위해 전체 공원 및 정원의 300헥타르가 넘는 부지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확대하여 거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콘크리트 수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 비산-양 모 키오

파크(Bishan-Ang Mo Kio Park)와 비를 저장하는 호수의 기능을 강조하여 조성된 주룽 레이크 가든(Jurong Lake Garden)은 인공적인 환경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자연놀이터(nature playgarden)와 치유정원(therapeutic garden)은 자연적 요소를 도입하여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자연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도심이지만 자연과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유정원은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포함한 거주민들의 정신적 피로 완화와 웰빙 증진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2030년까지 30개의 치유정원을 건설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회복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싱가포르의 치유정원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주요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계획되고 있다(National Parks Board, 2017). 먼저 방문

객들이 공간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레이아웃과 루프 형태의 연속적으로 연결된 길을 제공해야 한다. 곡선형 길과 나무 및 식물로 앞이 가려진 공간 계획은 다음에 무엇이 나오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가진 나무, 식물, 꽃, 산책로, 벤치 등 오감을 자극하여 감각 연계(sensory engagement)가 일어나게 만드는 환경 조성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치유적 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문객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길로 계획하여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이스트 코스트 파크(East Coast Park) 안에 조성된 치유정원은 2023년 2월 완공되어 방문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치유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유정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치유원에 프로그램을 통해 저항도의 운동 증진 및 운동 기능 향상, 감각 활용을 통한 기억력 자극,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자연과의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등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전략3: 도시 내 자연경관 복원

싱가포르는 2030 녹색계획을 통해 도시경관에 자연을 복원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으로 인한 치유효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2030년까지 산업 지역에 최소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나무 심는 속도를 두 배로 늘려 싱가포르 전역에 100만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시 전역의 녹지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나라 전체에 200헥타르의 고층 녹지를 조성하여 제한된 토지 내에 녹지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Skyrise Greenery)는 건물의 외벽, 발코니, 테라스 및 지붕 공간을 녹화하여 고층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옥상녹화와 수직녹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녹지 조성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건물에 대한 녹화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자금의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옥상녹화는 제곱미터당 200싱가포르달러(약 19만 6,000원), 수직녹화는 제곱미터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9만 원)로 설치 비용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파크로열 컬렉션 피커링 옥상 녹화(좌)와 옥상 텃밭(우)

출처: National Parks Board(2023e). <https://skyrisegreenery.nparks.gov.sg/skyrise-greenery/rooftop/>

받아 진행된 옥상 및 수직 녹화는 완공 후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철거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5년 동안 일정 비율로 회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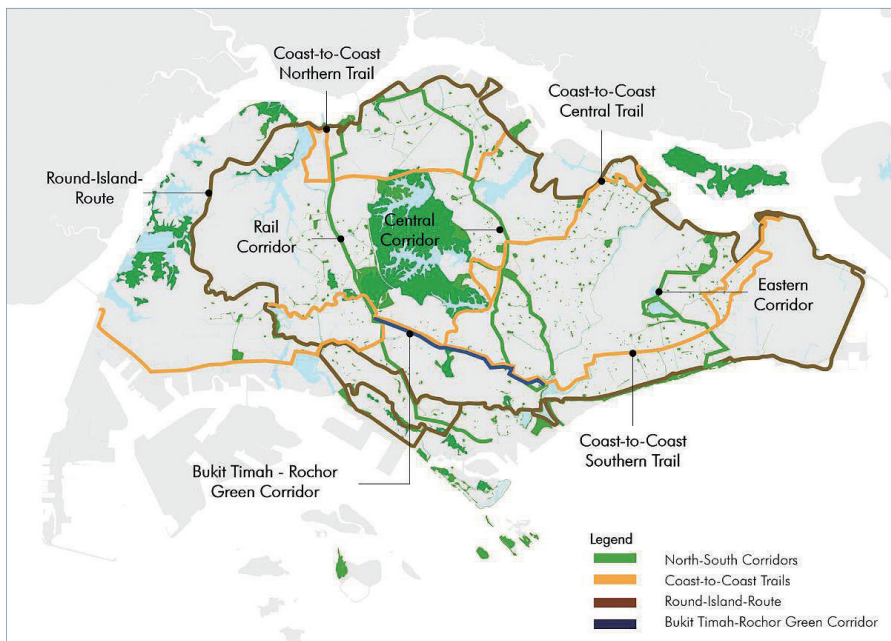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 사업은 식자재를 기르는 텃밭 형식의 커뮤니티 옥상정원, 치유 성격의 옥상정원,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 여러 형태의 녹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우수 유출 저감 등 기후적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내 녹지 면적 증가, 생태적 연결성 향상, 동식물을 위한 서식지 조성 등 생태적 회복탄력성(ecological resilience)과 더불어 사회활동과 여가를 위한 공동 녹지공간 제공, 거주민들의 치유와 웰빙 증진효과 등 사회적 회복탄력성(social resilience)이 높아지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전략4: 녹지 공간간 연결성 강화

자연보호구역, 공원, 정원 등 녹지공간 간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생태통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거주민들에게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연거리(Nature Ways)는 새와 나비 같은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한 나무와 관목을 심은 경로로서, 도시 내의 생물 다양성을 보장해 주고 거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거리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자연거리는 숲의 자연적 구조를 최대한 모방하여 설계되고 있으며, 거리를 따라 나무와 관목 등을 심어 숲과 유사한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거리를 따라 형성된 녹지를 통해 나비와 새 등이 이동하게 되므로 꽃을 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총 190킬로미터에 달하는 49개의 자연거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지도

출처: National Parks Board (2023f).
<https://pcn.nparks.gov.sg/known-our-pcn/island-wide-routes/>



탬피니스 파크 커넥터
(Tampines Park Connector)

자연거리를 확장하여 300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크 커넥터(Park Connector)는 공원·녹지·오픈스페이스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그린웨이를 의미한다. 현재 300킬로미터 이상의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총 500킬로미터의 파크 커넥터를 확보하여 모든 거주민들이 10분 이내에 도보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5: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지역사회의 동물들과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시 생태계에 다양성을 더하여 거주민의 복지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동물보호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청(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은 협력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원산 동식물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협받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해당 동물종의 상태를 평가하여 적색 목록(Red List)에 포함시키는 등 보전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민 참여 독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동체 그룹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된 자연 속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Community in Nature Initiative)는 싱가포르의 자연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작된 운동으로, 자연 관련 교육·행사·활동

및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내에서 우수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정원 속 커뮤니티(Community in Bloom)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정원의 조성 및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정원 디자인 및 관리, 새로운 커뮤니티 정원의 위치 선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자료, 경연 대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커뮤니티 정원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에 1,9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정원이 공공부지, 주택단지, 학교, 기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원들은 커뮤니티 융합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사점

이 글을 통해 싱가포르가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2030 녹색계획을 바탕으로 정원 속의 도시에서 자연 속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 특징은 한정된 토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공간을 도시 내에 조성하고자 하였고, 도시 내 모든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거주민들의 웰빙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물 재배,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원 및 녹지 조성이 생물 다양성 보전, 건강 증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 또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자연 보전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플랫폼을 제공 및 지원하여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연 보전 및 도시 내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서울특별시. (2023). 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서울' 구상 발표...서울이 365일 녹색으로 물든다. <https://mayor.seoul.go.kr/app/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1738&main=pc>
-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3 National Parks Board. (2017). Design Guidelines for Therapeutic Gardens in Singapore. https://www.nparks.gov.sg/-/media/nparks-real-content/gardens-parks-and-nature/therapeutic-gardens/therapeutic-garden-in-singapore-book_forview_digital.ashx
- 4 National Parks Board. (2023a). Singapore, Our City in Nature. <https://www.nparks.gov.sg/about-us/city-in-nature>
- 5 National Parks Board. (2023b). Nature Park Network & Nature Corridors.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nature-park-network>
- 6 National Parks Board. (2023c). Therapeutic Gardens.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therapeutic-gardens>
- 7 National Parks Board. (2023d). Therapeutic Horticulture Programmes.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therapeutic-gardens/therapeutic-horticulture-programmes>
- 8 National Parks Board. (2023e). Rooftop Greenery. <https://skyrisegreenery.nparks.gov.sg/skyrise-greenery/rooftop/>
- 9 National Parks Board. (2023f). Island-wide Routes. <https://pcn.nparks.gov.sg/know-our-pcn/island-wide-routes/>
- 10 Ng, K. G. (2022). 4 new parks included in Labrador Nature Park network; 2 will be ready with Greater Southern Waterfront flats.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environment/new-green-network-centred-on-labrador-nature-reserve-to-include-4-new-parks>

파리의 개인형 이동수단 금지 정책과 도시 친환경 이동수단 정착 방향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파리 시내 전동 킥보드 서비스 종료

프랑스 파리는 친환경 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방법으로 벨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넓혀 나갔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자동차보다 저렴하며 실용적이고 전기로 움직이기에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휴대가 용이하여 보관도 쉽고,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 택시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기 위한 중간 이동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불과 몇 년 만에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사용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프랑스 저널 <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제조 과정과 기계의 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난폭한 운행과 무분별한 주차 점유로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파리가 추진 중인 친환경 이동수단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2023년 4월 2일 파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서비스 중단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전동 킥보드 사업 전면 철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투표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투표소 203곳이 설치되었다. 1만 3,084명의 파리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 89.03%가 서비스 중단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8월 31일 자정까지 파리 시내에 있는 민간 전동 킥보드(Lime, Dott, Tier) 1만 5,000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자리 대부분은 자전거 주차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유지 찬반을 위한 투표용지(좌) 투표 중인 파리 시민들(우)

출처: <https://www.paris.fr/pages/pour-ou-contre-les-trottinettes-en-libre-service-23231>



©Josephine Brueder/Ville de Paris

전동 킥보드가 도시에 끼치는 영향

개인형 모빌리티는 교통체증이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2018년 여름에 파리에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약 31만 5,000명이 약 200만 번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 세계 연간 탑승 횟수의 약 8%에 해당된다. 그리고 출시 1년 후에는 파리에 13개 업체가 총 2만~4만 대의 전동 킥보드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2019년 기준).

이렇듯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흔히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파리 전역에서 수행된 조사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지하철보다 1킬로미터당 6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동 중에 나오는 탄소량은 적지만 사용자가 많아지고 생산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짧은 배터리 수명으로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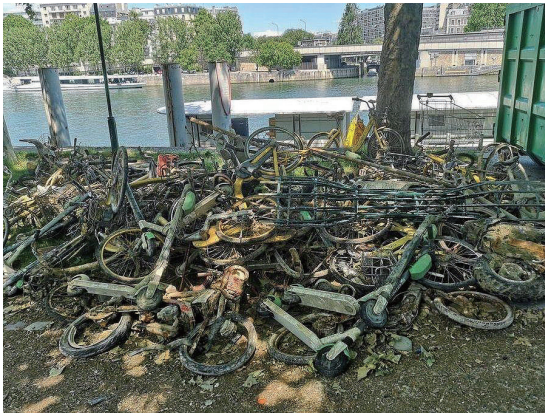
사용자의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인한 잦은 부상도 문제가 되었다. 안전장치 관련 부상 건수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거의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90%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42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8명, 부상자 수는 811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한 것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의 공통점은 보호 헬멧과 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킥보드의 상태 또한 좋지 않았는데, 꽤 많은 수의 킥보드가 조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잔고장이 있었다. 사고율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 도입 후 전에 비해 7.3배 증가하였다.

빠른 속도 또한 문제가 된다. 법적 제한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이고 기계 또한 법적 최대속도에 맞춰 설계된다. 그러나 일부 웹사이트에서 제한속도 잠금을 해제하는 법을 알려 주고 있으며, 이렇게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는 시속 70킬로미터에 가까운



도로 위에 난잡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센강 부근에 버려진 전동 킥보드

속력을 낸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만큼 위험하고 자전거보다 8배가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일 큰 문제점은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최근 아버지와 함께 센강에서 3년간 13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건진 한 아이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용자들이 본인의 편의를 우선시한 나머지 사용한 킥보드를 정해진 주차공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길이나 강가에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용 방식은 결국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는 환경을 보호하

며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 처음의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폐를 끼치고 공공 공간을 훼손하며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을 유발하는 등 도심 내 문젯거리가 되었다.

전동 킥보드 금지 이후

파리시는 벌금과 안전수칙 강화 같은 조치를 취하였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허가를 설정하고 규칙을 강화하여 예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중간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모한 행동을 줄이고 전동 킥보드 사용자와 다른 도로 사용자 간의 공존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운영 사업자인 라임(Lime)은 전기자전거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라임은 생태학적 · 실용적인 대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만 대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프랑스 라임의 총책임자인 하디 카람(Hadi Karam)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이용은 이미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환경과 편의의 대안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파리가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떨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철수를 결정하기 한 두 달 전인 지난 7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규제를 강화하는 파리와는 반대로 16세 이상은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의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파리가 겪었던 교통사고 증가를 비롯해 무분별한 도로 점유와 같은 문제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자리를 대신하는 전기자전거 서비스: 그러나 주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일본은 2킬로미터 이내의 이동이 자동차에서 전동 킥보드로 바뀐다면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이용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이동성 해결책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파리에서 킥보드를 제공하였던 운영업체들은 이미 전기자전거 공급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파리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또 다른 환경적 대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출혈에 봉대를 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장기적으로 사고 급증을 막기 위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당장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동성의 효율을 가져다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늘고 전동 킥보드의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파리시가 ‘보행자 우선’ 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전,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내에서 더욱 줄어든 제한속도(전 구역 시속 30킬로미터)와 잦은 신호 변경, 전보다 줄어들어 좁고 불편한 차도,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해 지친 운전자들은 예전처럼 매너 있게 양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만큼 편의를 등에 업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쉽게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스스로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윤행을 계속하고 있다.

파리의 전동 킥보드 금지는 수도의 도시 이동성 발전에 전환점이 되었다. 일부 사용자는 효율적인 교통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반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정은 공공공간을 보다 조화롭게 존중하는 공존을 만들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려이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이동수단을 갖추고 도로의 주인을 자동차에서 친환경 이동수단과 보행자로 옮긴다고 한들,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도로사용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 이는 친환경 이동수단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모든 나라와 도시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작 도시민의 삶과 일상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친환경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환경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파리는 유럽의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종료한 도시가 되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환경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들이지만, 그 방법이 사람들의 쾌적한 일상을 해친다면 과감하게 멈출 줄 아는 여유와 결단 있는 모습 또한 가졌다.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라는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그저 밀어붙이기보다 연구를 통해 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

영하여 서비스를 종료한 시의 결정 과정은 인상적이다. 시민의 수요와 필요에 민감히 대응하고 도시의 요청에 협력적인 운영업체의 모습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늘려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냉정하게 친환경 정책이 도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pages/pour-ou-contre-les-trottinettes-en-libre-service-23231>
- 2 Académie Nationale de Médecine. (2022). Rapport d'accidentologie des trottinette électriques.
- 3 Fournier, C. (2022). Les trottinettes électriques partagées et leur bilan environnemental peu reluisant. Euronews. <https://fr.euronews.com/green/2022/09/16/le-bilan-environnemental-peu-reuisant-des-trottinettes-electriques-partagees>
- 4 Reporterre. (2022). Les trottinettes électriques sont «un problème sanitaire majeur». <https://reporterre.net/Les-trottinettes-electriques-sont-un-probleme-sanitaire-majeur>
- 5 Ville de Paris. (2022). Etude sur les usages et usagers de la micromobilité à paris.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경과 및 수상작 소개

유예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추진 배경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축제로,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의 저변 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23년 제13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한옥정책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총 상금 4,850만 원에 달하는 대형 공모전으로,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 실무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옥 활성화 정책과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07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7~2011)' 발표	2008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국정과제 선정	2009 한옥기술개발 국가 R&D 추진	2010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2010~ 2014)' 발표 및 대통령보고
2011 '국가한옥센터' 설립(2011.5.12) 제1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4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2014.6.3)	2023 제1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진행 과정

공모전은 '준공한옥', '학생공모전(前계획)', '사진', '영상'까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학생공모전 부문은 한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오릉 능안마을'이라는 주제로 문화유산과 공생하는 현대 도시의 고민을 한옥으로 풀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주

공고는 2023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작품 등록 및 접수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시상식은 11월 2일, 전시회는 11월 2일부터 5일, '2023 한옥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시회와 시상식을 동시 개최하여 수상자들 간의 성과 공유와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포스터

개별 건물들의 특성을 살리고 하나의 블록 안에서 짜임새 있는 조합을 만들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는 한옥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학생공모전 부문 주제 해제문 中 일부



준공한옥 부문 현장심사(2차)



학생공모전 부문 발표심사(2차)



사진 부문 종합심사(2차)

수상작 소개

준공한옥 부문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3개 작품이 수상하였다. 올해의 한옥대상인 ‘정다운 집’은 한옥에 대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며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 고유의 공간이 잘 구현된 작품으로, 현대 주거에서 한옥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올해의 한옥상에는 ‘천일한의원(병원)’과 ‘화림원(카페)’이 수상하여 다양한 용도의 한옥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학생공모전 부문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대상을 차지한 ‘[잇:다]’는 주어진 세 개 부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전체 공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등을 계획함으로써 향후 창릉신도시가 품어야 할 능안마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

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 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을 합쳐 총 590건의 작품이 접수될 만큼 한옥에 대한 일반 대중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9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사진 부문의 대상은 백양사의 설경을 담은 ‘설일’로, 담장 너머 눈 오는 한옥 지붕 사진을 통해 한옥의 아름다운 인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부문은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8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영상 부문 대상은 ‘또 다른 한류, 한옥’으로, 다채로운 한옥의 아름다움을 뛰어난 촬영과 편집으로 잘 표현하였고, 자막의 내용과 영상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았다.

이상 준공한옥 3개, 학생공모전 13개, 사진 29개, 영상 8개 수상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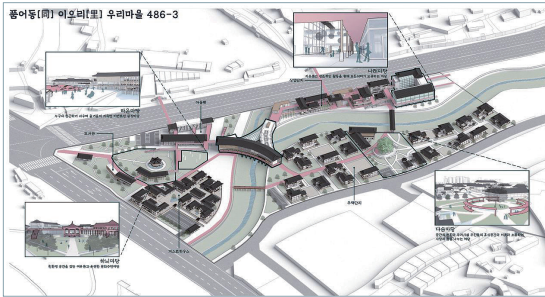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전시회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준공한옥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 정다운 집



학생공모전 부문 대상 : (잇:다)



사진 부문 대상 : 설일



영상 부문 대상 : 또 다른 한류, 한옥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의의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한옥 홍보 정책을 꾸준히 이끌어왔으며, 한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차례 조정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단순히 한옥에 관심 있는 이들의 작품을 시상하고 홍보하는 이벤트를 넘어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여건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연구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의 보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계속해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23). 올해의 한옥 대상... 한옥 고유 여백의 미(美) 살린 '정다운 집'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 48점 발표... 11월 2일부터 수상작 전시회-, 11월 2일 보도자료.
- 2 국토교통부. (2024).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건축공간연구원.
- 3 국토교통부. (2024).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작품집. 건축공간연구원.

2023 세계건축축제 올해의 건축상에 틀을 깬 학교 건축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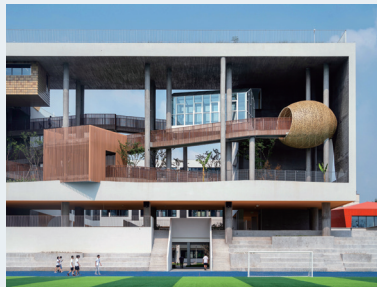
<https://www.worldbuildingsdirectory.com/entries/huizhen-high-school/>
<https://edition.cnn.com/style/huizhen-high-school-world-building-of-the-year/index.html>

2023 세계건축축제(World Architecture Festival) 올해의 건축상(World Building of the Year)에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위치한 후이전 고등학교(Huizhen High School)가 선정되었다.

후이전 고등학교 프로젝트는 도시에 들어서는 교육 공간 디자인에 대한 '대담한 탐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는 '시간을 낭비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점점 부족해지는 도시공간에 비해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에서 학교 공간은 효율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건축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이 건축가들의 설명이다.

야외 강당과 나무가 들어선 통로, 30개 학급을 위한 학습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의 공용공간은 내외부가 구분이 없이 열려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교실은 규범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모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학습 공간은 건축의 모서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동을 위해서는 나무가 식재된 구불구불한 길과 경사로를 지나야 한다. 교실 사이의 길이 최단의 직선거리가 아닌, 여유를 가지고 걸어야 하는 숲길이 되는 것이다. 밀집해 겹겹이 조성된 학습 공간 위로 오르락내리락 경사로가 연결되는 형태의 옥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옥상 또한 녹지로 조성해 학생들에게 대규모의 산책로를 제공한다. 완만한 경사 구간에는 노천 강의 시설이 있어, 필요 시 교실 밖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건축축제 프로그램 디렉터 폴 핀치(Paul Finch)는 "학생들이 규범적 건축에 갇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 새로운 교육 공간의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며, "산책, 신선한 공기, 학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반영한 공간"이라고 평가하였다.



후이전 고등학교 ©Approach Design Studio - 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Group Co.,Ltd

출처: 세계건축축제 보도자료. <https://www.v2com-newswire.com/en/newsroom/categories/commercial-architecture/press-kits/661-80/world-building-of-the-year-and-interior-of-the-year-revealed-at-2023-world-architecture-festival>(검색일: 2023.12.15.)

프랑크푸르트, 기후 적응형 설계 위한 실무지침 마련

<https://frankfurt.de/aktuelle-meldung/Meldungen/Bauvorhaben-zukunftssicher-planen/>
<https://frankfurt.de/themen/klima-und-energie/klimaanpassung/gestaltungssatzung-freiraum-und-klima>
<https://www.hlnug.de/themen/klimawandel-und-anpassung/handlungshilfen/planung-und-planungsrecht>

프랑크푸르트와 헤센 주립 자연 보존, 환경 및 지질학 사무국(이하 HLNUG)은 기후 적응형 설계를 위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2023년 5월 독일 헤센주 최초로 프랑크푸르트는 '열린 공간과 기후를 위한 설계 법령(Gestaltungssatzung Freiraum und Klima)'을 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내에서 이뤄지는 건물 신축과 개조에 대해 기후 적응형 설계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폭우,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열린 공간의 투수설계, 녹지화, 그늘 설치 등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와 HLNUG의 기후변화 및 적응센터는 헤센주 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주거지역 기후적응 위한 도시 설계 법령 실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실무지침은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의 열린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공개하거나 현장에 적합한 관목을 10% 이상 심어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그늘 조성, 녹색 쓰레기통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령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HLNUG은 토지이용계획, 기후적응지역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열린 공간과 기후를 위한
설계 법령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출처: 프랑크푸르트시 홈페이지.
<https://frankfurt.de/themen/klima-und-energie/klimaanpassung/gestaltungssatzung-freiraum-und-klima>(검색일: 2023.12.12.)

뉴사우스웨일스, 건축 전담 규제 기관 'NSW 건축위원회' 설립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boosting-building-quality>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new-building-laws>
<https://www.nsw.gov.au/housing-and-construction/building-commission>

뉴사우스웨일스는 12월 4일 건축 부문에 대한 독립형 규제기관인 NSW 건축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건축 부문에서 일어난 각종 법률 위반 및 기준 미달 행위로 인하여 건축 인증 기관 4곳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업계 전반의 규정 준수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NSW 건축위원회는 기존 NSW Fair Trading과 Office of the Building Commissioner를 통합하여 주거용 건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 기관으로, 주택의 안정과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건축 산업의 품질 및 표준을 실행하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구축한다.

또한 NSW Fair Trading의 건축 및 건설 영역 업무를 건축위원회로 이관하여 규제, 면허, 감독에 이르는 원스톱 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 중밀도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모든 주택용 건물에 대한 출입 권한 부여, 결함 발생 시 보수 요구 등 건축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며, 건축부 장관과 함께 해당 부문을 내각 수준으로 승격하여 업계 전반의 표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출처: 뉴사우스웨일스주 홈페이지. <https://www.nsw.gov.au/housing-and-construction/building-commission>

디트로이트, 주행 중 전기차 충전 가능한 도로 설치

<https://detroitmi.gov/news/mdot-city-detroit-and-electreon-unveil-nations-first-public-ev-charging-roadway-michigan-central>
<https://www.michigan.gov/mdot/travel/mobility/initiatives/wireless-charging-roadway>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전기차를 멈추지 않고 주행 중에 도로를 통해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 교통부(Michiga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DOT)와 함께 전기차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공공 도로를 설치하여 운영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도로가 설치된 곳은 디트로이트 서쪽 시내 14번가로, 디트로이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도로다. 당초 약 1마일 길이의 무선 충전 도로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현재 4분의 1마일 구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해당 도로의 노면 아래로 구리 송전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닥에 수신기가 설치된 전기차가 근접하면 무선으로 배터리가 충전된다. 충전 구간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주행 중일 때 수신기가 작동하며, 송전 코일은 승인된 수신기가 있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만 활성화된다. 시는 필요한 차체에 한해 전기 에너지가 생성·전송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야생동물 등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남은 구간에 대한 설치는 2023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2024년 초부터 보다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14번가는 포드(Ford)가 자율주행차 산업 허브로 개발 중인 미시간 센트럴(Michigan Central)을 지나는데, 포드의 지원을 받아 전용 수신기가 달린 출퇴근 셔틀버스를 해당 구간에서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에 기술 적용 또한 시험해본다는 방침이다.

미시간주는 2021년 미국 최초로 공공 도로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MDOT와 무선 충전 솔루션 업체인 일렉트레온(Electreon)이 전기 도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시간 도로에서 5년간 기술 시범 운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무선 충전 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차

출처: 디트로이트 홈페이지, <https://detroitmi.gov/news/mdot-city-detroit-and-electreon-unveil-nations-first-public-ev-charging-roadway-michigan-central>(검색일: 2023.12.14.)



노면 아래 설치되는 구리 송전 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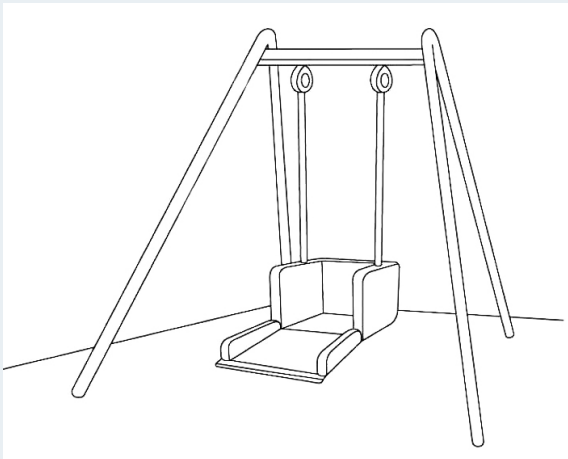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휠체어 이용 어린이 위한 안전한 놀이터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2023.10.31.

행정안전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안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부 고시)’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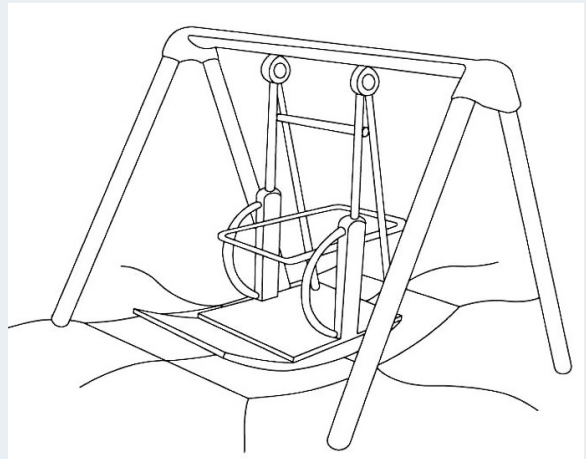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에 휠체어 그네 제작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 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보육시설 등의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 등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체 진입로를 가진 그네(1형)

출처: 행정안전부, (2023). 휠체어 이용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이 조성된다. 10월 31일 보도자료.



지면에 인접한 플랫폼을 가진 그네(2형)

어린이 보행환경안전 위한 시책 점검

부산광역시 보행도시정책과 보행권익증진팀
2023.10.19.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023.12.1.

부산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추진

부산시는 10월 19일,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후속 추진사항 점검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5월 22일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하였으며,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기준 마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재정 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 4년간 총 6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85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CCTV, 시인성 강화, 보호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보도 설치 사업의 경우 고지대·구시가지로 좁은 도로가 많은 부산의 지형 특성상 실제 사업 가능지는 전체 수요의 10%로 파악되는데, 보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및 학교 담당 허물기 등 경찰청, 교육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자체기준을 통해 도로 경사도, 속도, 차로 수, 도로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점수화하였으며, 이를 16개 구·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효과 분석

서울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107대 설치 대상지의 교통사고에 대해 설치 전·후 2년씩, 총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26.7%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71%(31건 → 9건)로 크게 줄었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도 50.4% 감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200개소, 방호울타리 37km, 신호기 신설·교체 140개소 등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기·종점 노면표시 신규 설치와 기존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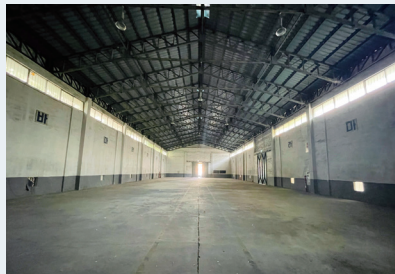
옐로카펫

출처: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71% | ...전국최초 무인단속카메라 효과분석. 12월 1일 보도자료.

시간 흘러 용도 잃은 도심 내 유허시설 재활용에 나선 지역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2023.10.10.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2023.11.19.



구미 보세장치장

출처: 경상북도. (2023). 구미 보세장치장,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10월 10일 보도자료.



당산 터널 내부

출처: 충청북도. (2023). 충북도, 당산 빈 터널
(舊 충무시설)을 도민의 품으로. 11월 19일 보도자료.

경상북도, 노후 산단 내 유허시설을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구미1국가산업단지 내 유허공간인 보세장치장을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경상북도는 보세장치장 재활용 계획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안심·놀터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전국 노후 산단 내 유허공간에 거점 육아시설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보세장치장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구미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수출입 화물을 보관하거나 통관을 지원하던 시설로 약 980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세장치장 B동을 영유아 놀이 공간과 문화 체험 공간, 어린이 독서 공간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세장치장 A동을 음식과 음료(F&B) 중심의 복합문화 여가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도는 이와 연계하여 보세장치장 전체를 산업단지 근로자 및 구미시민, 인근 시·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빈 충무시설 도민 공간으로 활용 계획

충청북도가 지난 50년간 충무시설로 사용됐던 충북도청 인근 당산 터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이후 복합문화공간 등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티파크 분야의 일환으로,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 청사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 중 일부다. 당산 터널은 1973년에 충무시설로 준공되어 전쟁 등 위기 상황을 위한 지휘 시설로 사용되었다. 부지 7,501.2제곱미터, 건축면적 2,156제곱미터로 정문에서 후문까지 길이는 약 200미터 터널이며 폭 4미터, 높이 5.2미터의 아치형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도는 충무시설 이전공사 및 구조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터널의 천장 내벽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강공사를 실시, 11월 17일 보안 구역 해제 심의를 통과하였다. 도는 앞으로 이 당산 터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유허공간 관광 자원화를 위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 편의와 효율을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시도

대구시 버스운영과
2023.10.4.

제주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2023.10.31.



제주도 수산리, 태흥리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출처: 제주도. (2023). "부르면 온다"수요응답형(DRT)
읍서버스 제주 누빈다. 10월 31일 보도자료.

대구시, 출퇴근 교통편 부족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 운영
대구광역시는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승차자 지점과 운행구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교통 수단'을 본격 도입·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선제적으로 MaaS*를 도입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적용을 준비해 왔으며, 10월부터 의료R&D지구 일원(동구 울암동, 상매동, 매여동)을 기점으로 DRT를 본격 운영하여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임으로 탑승하며, 도시철도와 영천·경산 지역의 시내버스와 무료 환승도 적용된다.

시는 DRT 운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혁신도시 내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교통접근성 개선 DRT 시범사업과 DRT 운영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대구형 DRT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으로 교통취약지역 지원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를 호출하는 제주 수요응답형(DRT) 플랫폼 서비스인 '읍서버스'가 정식 출범하였다. 수요응답형 읍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도는 10월 31일 읍서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수산리, 태흥리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용객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버스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호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과 같으며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도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읍·면 교통취약지역의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수단의 가능성을 살피고, 모니터링 등으로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하나의 앱으로 최적 이동 경로를 검색하고, 연결된 모든 교통수단을 한번에 예약·결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을 통합 지원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건축과 도시공간

—

Vol.52

Winter 2023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사람들이 떠나가 회복이 필요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갈 곳과 놀 거리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다. 펀그라운드 진접은 청소년이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새로 만나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광장이자 아지트이다.

독특한 형태의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예도 있다.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도시의 지하, 잠자고 있던 유휴 공간을 매만져 청소년들이 그들의 활동과 활기로 완성할 수 있는 틀을 그려냈다.

편그라운드 진점 전경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방청소년문화의전



모든 청소년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 펀그라운드 진집
092

숲속, 우리들의 비밀기지
-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
108

모든 청소년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 펀그라운드 진집 | 네 개의 거친 콘크리트 코어탑은 분절된 덩어리로 펀그라운드의 존재를 알린다. 매끈한 곡면 루버의 반복은 이와 대비를 이루며 얼굴을 만들고 청소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도로에서부터 실내를 거쳐 후정까지 하나의 연결체로 이어지는 광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을 찾아오고 이용하게 해 주는 도시적 장치이다.

숲속, 우리들의 비밀기지 -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면서도 벙커라는 고유한 공간적 특성이 서로 방해 받지 않고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설계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원형을 복원하고 관계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이슈, 기존 벙커 구조물의 토목구조 분야, 새로이 개입되는 내부 요소들은 건축의 구조에서 모두 검토되었다.

모든 청소년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편그라운드 진점

신호섭, 신경미
신아키텍츠 공동대표

개요

위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23
용도	청소년수련시설
대지면적	1,429m ²
건축면적	772m ²
연면적	3,122m ²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	14대
높이	19.2m
건폐율	54.03%
용적률	156.65%
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곡면 시트, 컬러강판, 제물치장콘크리트,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자작나무합판, 노출콘크리트, 코르크바닥재, 마천석
설계	신아키텍츠(신호섭, 신경미)
설계담당	이나영, 김정민, 이미소, 강지영, 융상아
구조설계	더원구조엔지니어링
시공	경현종합건설
기계설계	주성ENG.
전기설계	건창기술단
조경	스튜디오 테라
설계기간	2020.6.~2021.4.
시공기간	2021.5.~2022.6.
준공	2022.7.
예산	91억 원
공사비	110억 원
건축주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전경

펀그라운드 진점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문화 거점 시설이자 아이트로서 건강한 교류와
즐거움이 가득한, 열린 플랫폼을 만드는 과감한 시도이다.



매끈한 곡면 루버와 판돌이 특징적인 전면부





생동감으로 충만한 라운지



© 지효숙



© 지효숙



© 지효숙

상 워크스테이션
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언더그라운드



02
12월 14일



02
12월 14일

상 편그라운드 휴게공간
하 낮선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는 실린더



정해진 동선이 없는,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

공간 경험의 축적은 개개인의 부와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은 좋은 공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문화적 합의와 토대를
 영양분 삼아 자라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 경험 축이다.



©진효숙

측창과 천장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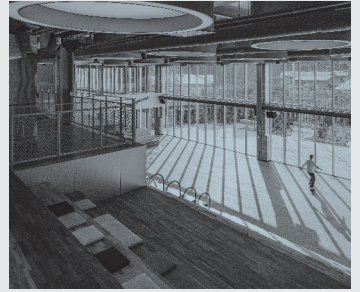
장소

편그라운드 진접이 위치한 곳은 예전에 진접읍사무소가 있던 자리이다. ‘읍내통’이라고 불리던, 그래도 진접에서는 꽤나 붐비던 중심가였을 것이다. 그 뒤로 읍사무소는 사라지고 진접의 변화가인 장현로는 오일장으로 명맥을 이어가며 구도심의 중심을 지켜 왔지만 점점 더 활기를 잃어 갔다. 왕숙천 너머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의 무게추가 조금 더 기울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활력이 없어지는 도시들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떠나고, 장소는 추억이 되어 유명처럼 뇌리에 떠돈다. 회복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럴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장소를 원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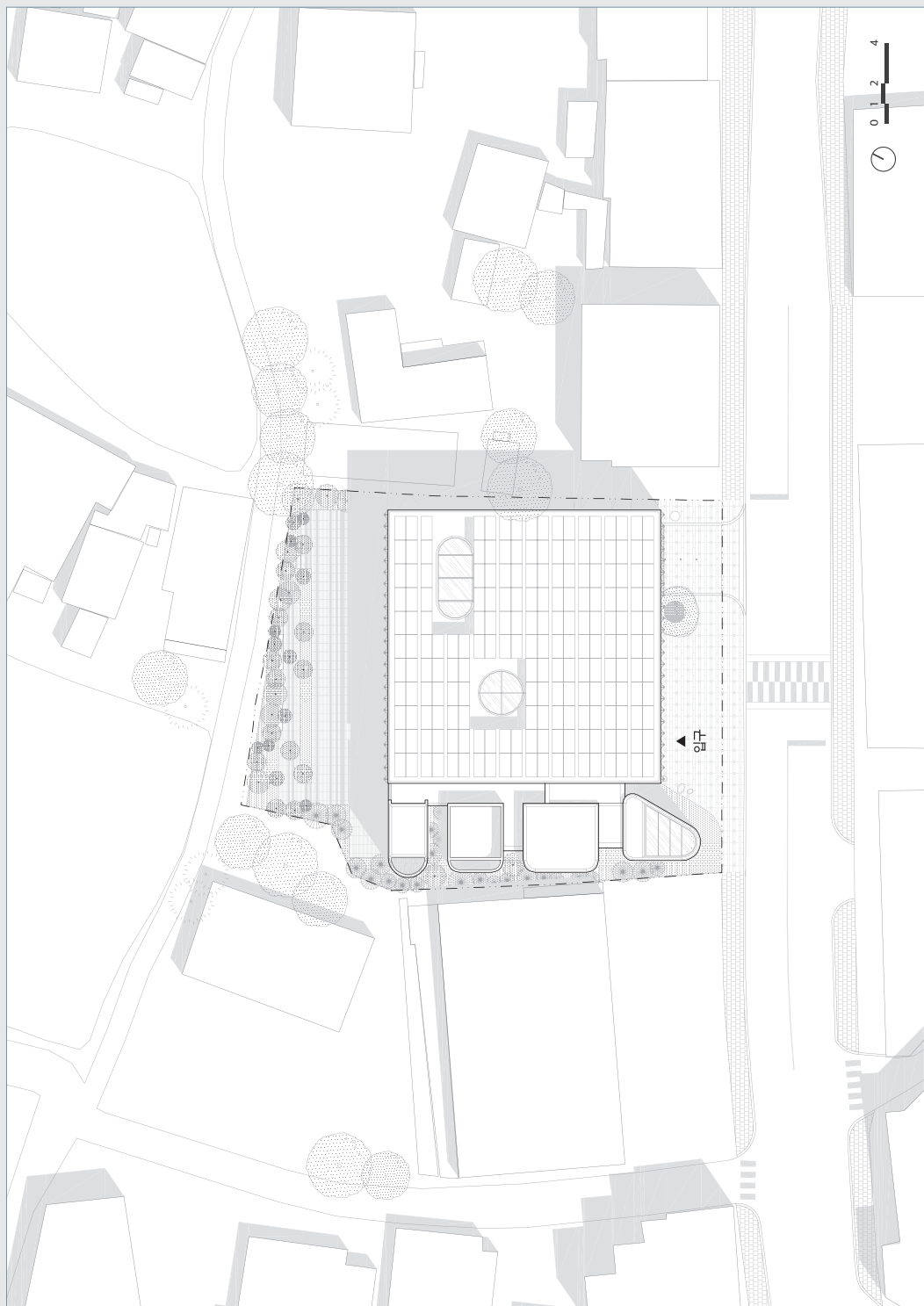
청소년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원으로 떠났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어떤 루틴이 이보다 더 지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행복한 걸까? 학업을 잘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다. 돈지갑을 열어 봐야 PC방, 저렴한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구석진 놀이터 그네라도 타야 한다. 갈 곳이 없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당연하게 ‘자본’을 쓰지 않는다.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자 주역이다”라고 어른들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렇기에 공부에 힘쓰라는 마무리가 대부분이지 일상에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일정 나이까지 투표권도 없어 자신들의 요구나 의견을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충분히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어른이 될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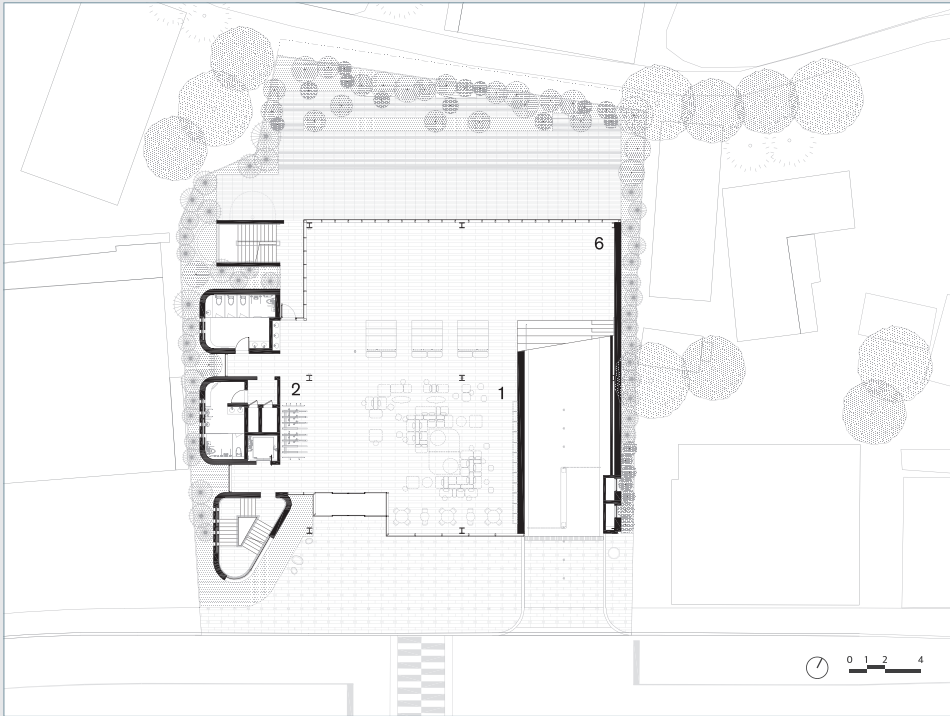
© 진접진



상 편그라운드 진접 전경
중 생동감으로 충만한 라운지
하 워크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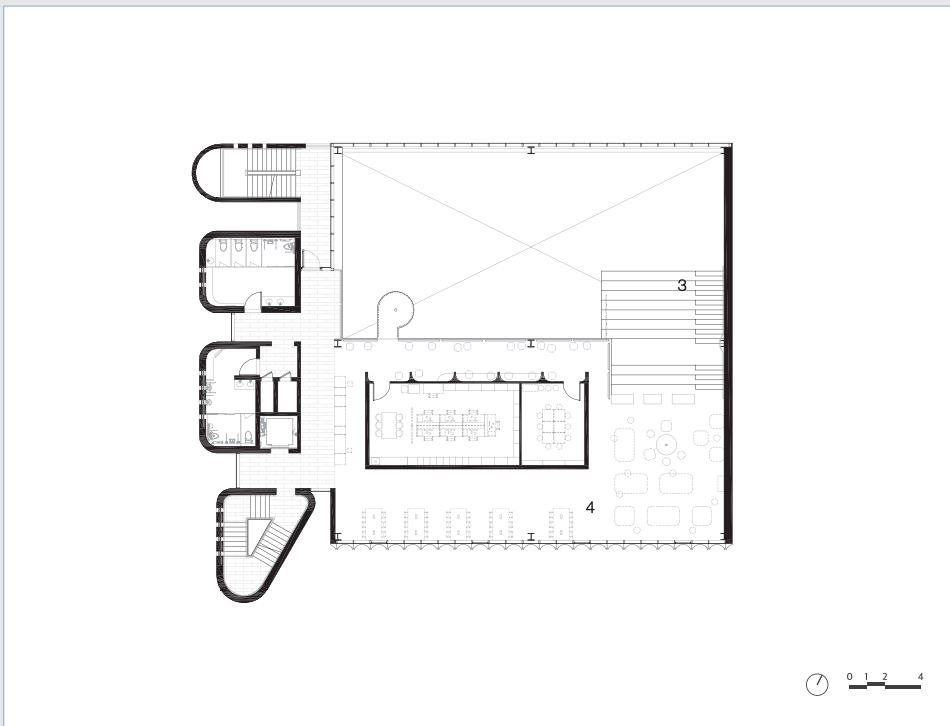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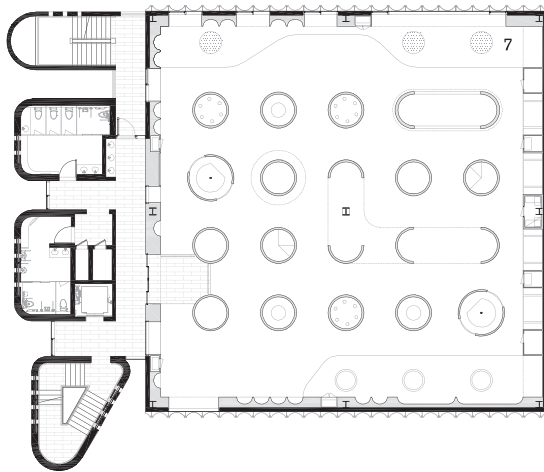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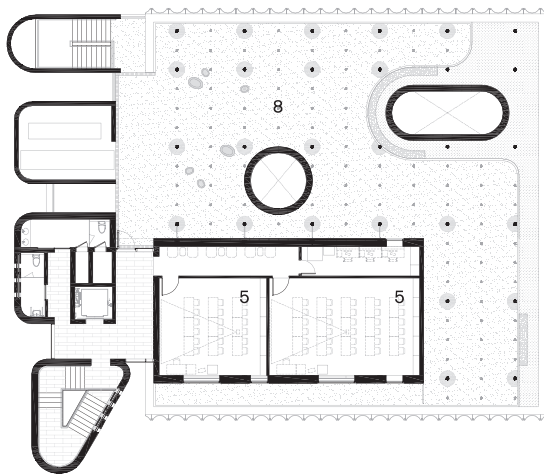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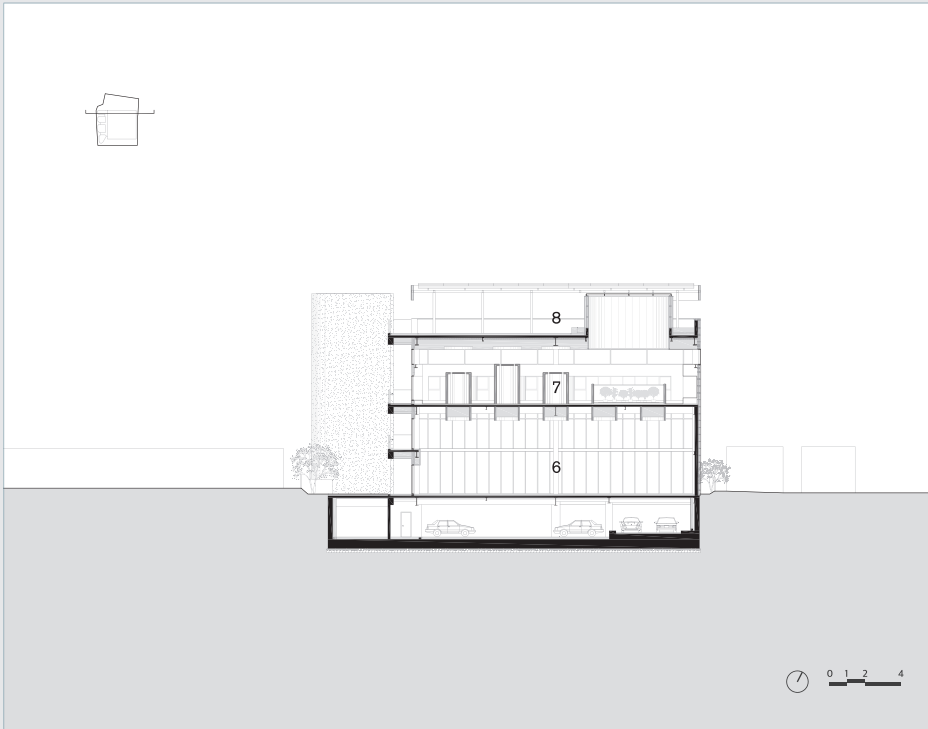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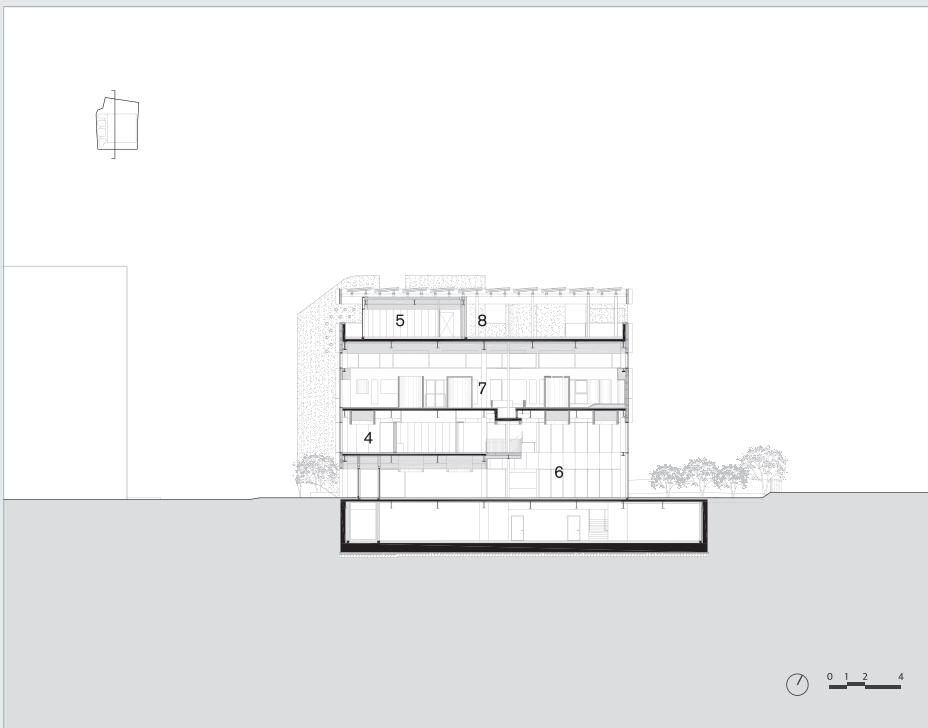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단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상 낮선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는 실린더
중 편그라운드 휴게공간
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언더그라운드

편그라운드: 재미, 교류, 도전

네 개의 거친 콘크리트 코어탑은 분절된 덩어리로 편그라운드의 존재를 알린다. 매끈한 곡면 루버의 반복은 이와 대비를 이루며 얼굴을 만들고 청소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도로에서부터 실내를 거쳐 후정까지 하나의 연결체로 이어지는 광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을 찾아오고 이용하게 해 주는 도시적 장치이다. 편그라운드 진점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문화 거점 시설이자 아지트로써 건강한 교류와 즐거움이 가득한, 열린 플랫폼을 만드는 과감한 시도이다.

언더그라운드: 광장, 소통, 만남

이동식 계단과 함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열린 거리, 교류하는 공터이다. 관통하는 듯 내려온 실린더 조명 아래 어떠한 것도 규정되지 않는 모든 가능성의 공간이자, 춤추고 뛰고 노는 생동감으로 충만한 장소이다. 아트북 서재와 라운지는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공간이면서 만남과 기다림이 있는 곳이다.

온그라운드: 자유, 아지트, 확장

하루 종일 측창과 천창을 통해 따듯한 자연광을 품는다.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20개의 실린더는 청소년 개개인의 능동적 선택을 담으면서 각기 다른 감각과 높이를 통해 새롭고 낮선 공간 경험을 유도한다. 청소년들이 정해지지 않은 동선 속에서 자신만의 아지트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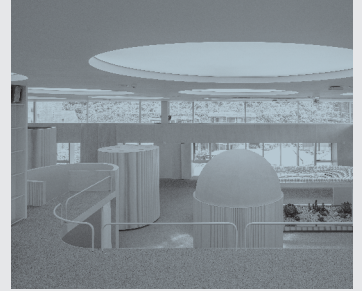
오버그라운드: 자연, 교감, 휴식

노란 폴리카보네이트 볼륨이 관통하는 오버그라운드는 학습공간과 외부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주변 자연과 도시를 조망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패널 캐노피가 그늘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다양한 콘크리트 벤치와 바닥 패턴이 청소년의 공간 활용을 돕고 휴식하게 해 준다.

청소년을 위한 공공건축

공간 경험의 축적은 개개인의 부와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은 좋은 공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문화적 합의와 토대를 영양분 삼아 자라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 경험 축이다. 좋은 공공건축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저변과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건축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의 건축으로 진화한다. 공공건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건축가
김민준



상 정해진 동선이 없는,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
하 측창과 천장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

숲속, 우리들의 비밀기지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조진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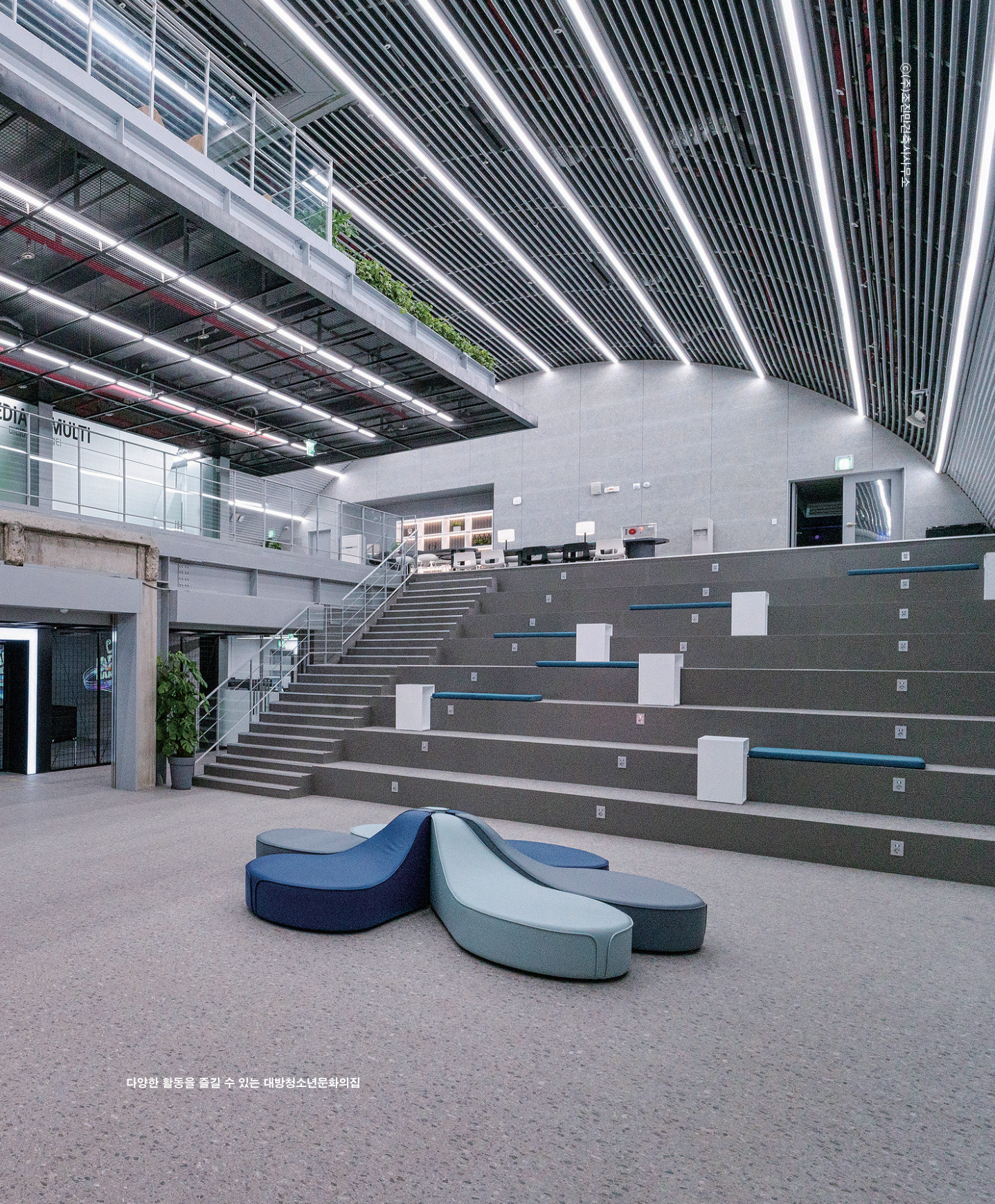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1
용도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대지면적	9,547.3m ²
연면적	1,491.5m ²
규모	지하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기존), 철골조(신설)
설계	조진만
설계담당	차승연
시공	옥포건설
설계기간	2020.1.~2021.4.
시공기간	2021.5.~2022.8.
공사비	약 35억 원
건축주	동작구청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외부 전경



지하 병커라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여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와 창작 활동,
교육과 휴식을 위한 복합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 과제였다.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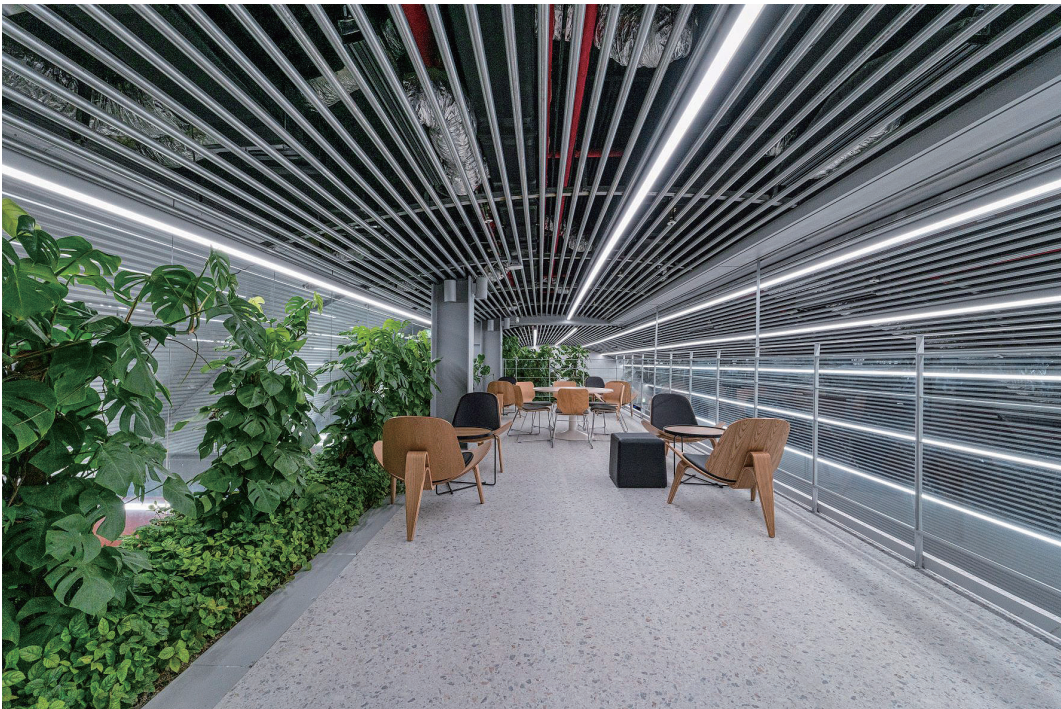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2층 미디어실
하 2층 네트워크 라운지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2층 스포츠코트
하 3층 청소년 전용 공간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청소년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다목적홀
하 군용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 변화

병커의 원형 스케일을 복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채우지 않고,
 그것들이 시간과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장소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보고 입체적 광장과 집,
 그리고 길을 구성하였다.



© (주)조민건축사무소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도심 속 부족한 가용지와 유희공간

경사진 지형 속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대방동. 부지는 마을 중앙에 산지 상부를 평탄화하여 만들어진 대방 근린공원의 산 자락 하부에 감추어져 있다. 부지 약 1킬로미터 반경으로 20여 개의 초·중·고가 있으나 마땅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을 꾸준히 동작구에 요청하였고, 먼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을 모색하였다. 서울 도심 속에 가용지는 늘 부족하다는 제약 속에서 지하에 방치된 벙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매력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동작구는 먼저 이 공간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인근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당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 공공건축가 참여 신청을 받아 7개 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출발하였다.

지하 공간의 새 발견

공모전 참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서울시와 수행한 고가하부 활용계획, 지하 유희공간 활용계획 등 평소에 도심 속 유희 부지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데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창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축매로 존재하던 것들과 새로운 관계성을 창조하는 것이 보다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근래 벙커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은 것도 한몫하였다. 제주 ‘빛의 벙커’라든지 여의도 벙커를 고친 갤러리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활용 면에서 정적이고 일방향적 관람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하 벙커가 동적이고 활동적인 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였다.

지하 벙커라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여 비밀상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와 창작 활동, 교육과 휴식을 위한 복합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주요 과제였다. 또한 대방 근린공원의 초입이 되는 가로와 접하는 특성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게도 내외부 공간을 통해 일상의 공공공간으로 기능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주)조진만건축사무소



상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외부 전경
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기존 벙커 사진

첫 대지 방문 후 모든 건축가가 입을 모아 비탈면 산지를 파내어 묻혀 있는 벙커를 일부 노출하고 천장을 통해 채광과 환기를 함으로써 지하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식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상부 지반의 불안전성과 가파른 경사, 오래된 구조체의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벙커라는 대공간과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미미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Palimpsest: 다시 쓰기의 과정

대방동의 벙커는 조성 시기가 불분명한 군용 시설이다. 가로 45미터, 세로 12미터, 높이 10미터의 지하 공간은 아파트 단지 옆 대방공원 안에 묻힌 채 완전히 도시에서 숨겨진 공간이다. 6·25전쟁 이후 인근에 보라매공군단이 위치하게 되었고, 이즈음 부대의 전시 작전기지 및 군수품 저장소로 특이하게 2개 층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돌산을 깎아 들어가 비교적 안정된 지반에 벙커를 만드는 것과 달리 이곳은 평지에 벙커와 배수지를 건설하고 그 위에 대규모의 성토를 해서 인공산이 만들어진 것임을 나중에 지반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의 군용 목적이 사라지고 방치되다가 1980년대 한동안 주류업자가 와인 저장고로 쓰기 위해 구에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그 이후 상부 근린공원의 관리용 자재창고 또는 건설 폐기물 보관소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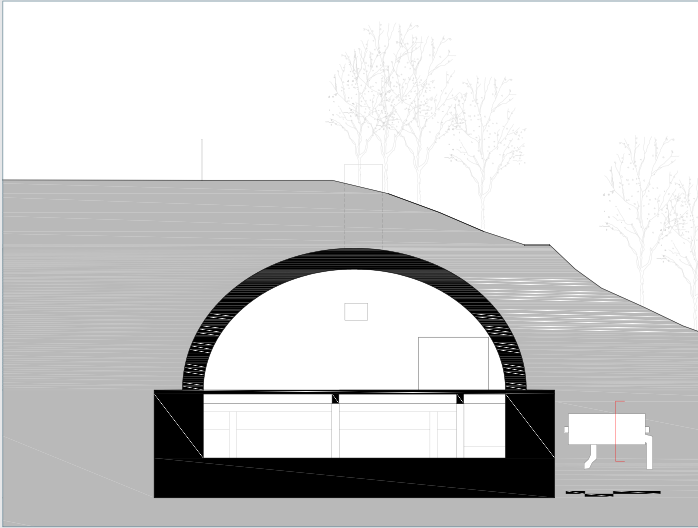
초기 한 달 남짓 짧은 공모전에서 제한된 자료로 만든 설계안은 상하 두 개로 분절된 공간을 중앙부 다목적 대공간의 보이드와 스탠드를 통해 연결하고 양단에 주요 실들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하여 각종 조사와 실측을 해 보니 타당성 검토에서 확인된 제반 정보들이 대부분 맞지 않았다. 또한 이 공간에 대해 국방부에서 아무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앞서 여러 사용과 변화를 통해 덧대어지고 변경된 부분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고분과 같은 벙커 속에서 설계를 멈추고 두세 달간 조사와 부분 철거 등을 거듭해야 하였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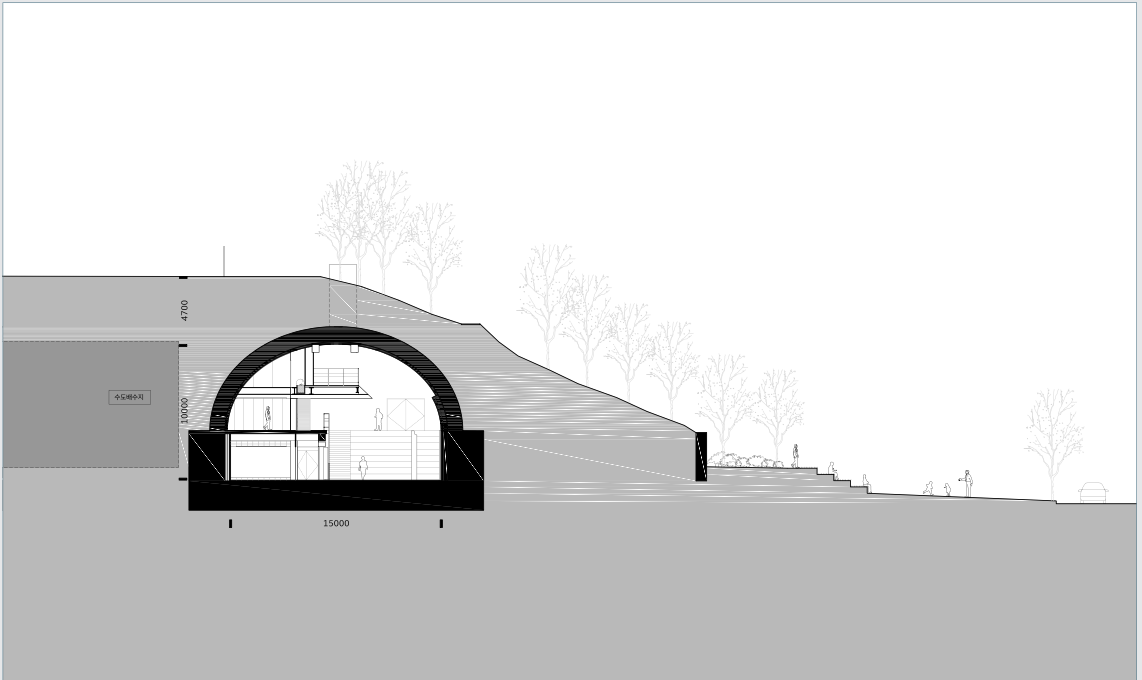


상 2층 메이커실
중·하 1층 ICT스포츠존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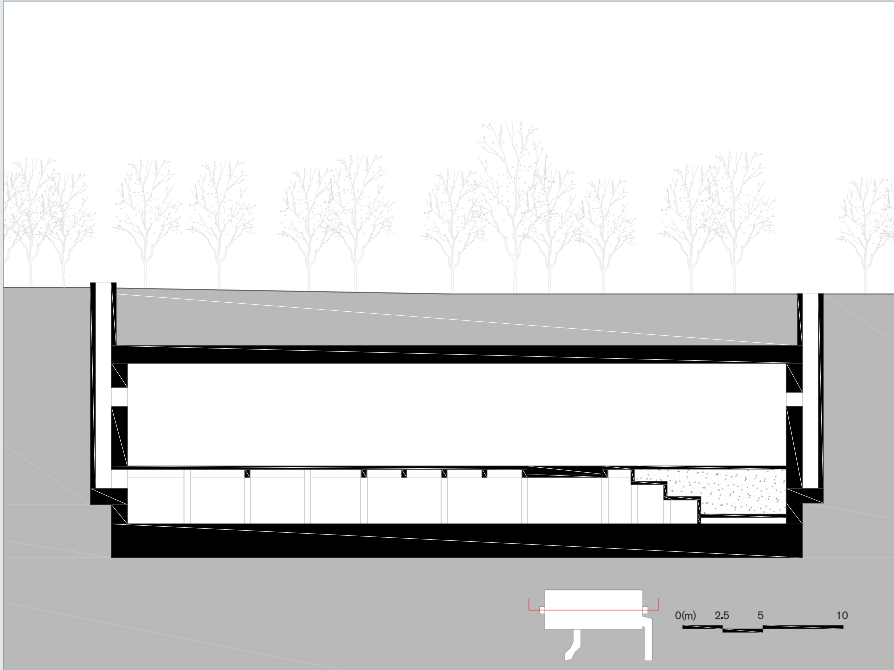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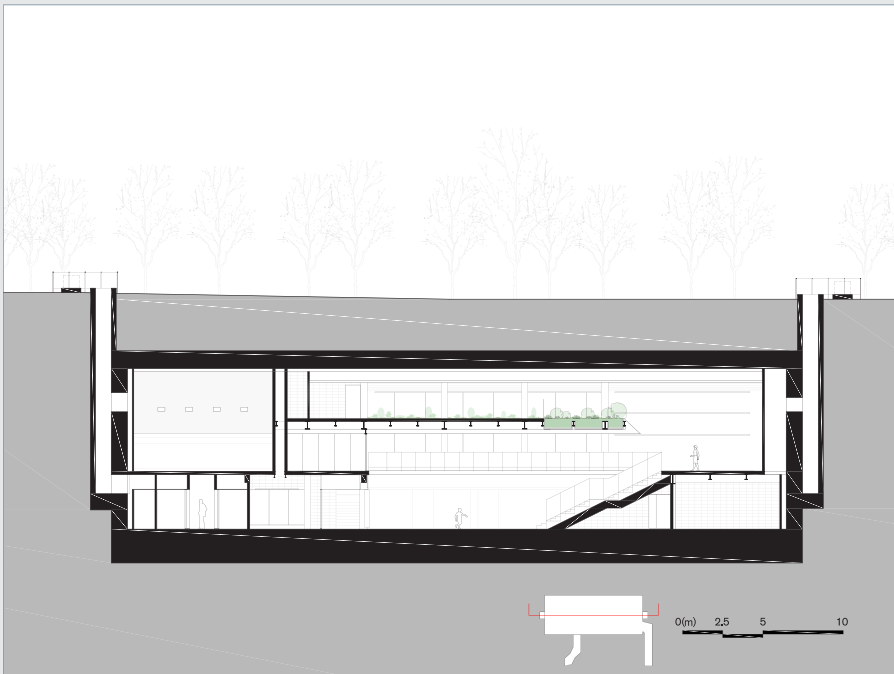


단면도(변경 전후)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단면도(변경 전후)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은 기존 설계안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변수들을 지니고 있었다. 어떻게든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면서도 병커라는 고유한 공간적 특성이 서로 방해 받지 않고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설계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원형을 복원하고 관계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이슈, 기존 병커 구조물의 토목구조 분야, 새로이 개입되는 내부 요소들은 건축의 구조에서 모두 검토되었다. 아울러 겨울 답사에서 결로 문제와 기존 환기구가 막히면서 발생한 공조의 문제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새로 발견되면서 설계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거기에 더해 설계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창궐로 발주처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기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혼란감이 일었고, 이로 인해 설계자에게 각종 검토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자문회의도 수차례 열렸다.

불완전한 것에는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는 '다비드 타워'라는 짓다 만 45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다. 1993년에 개발자가 사망하고 거기에 지역경제도 붕괴되면서 이 건물은 뼈대만 완성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속된 불황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둘 10여 년간 방치된 다비드 타워에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곳은 현재 750여 가구가 불법 거주하며 세계 최고층의 '수직형 빈민가'라 불린다.

초기에 임시 거처로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점차 건물을 변형시켰다. 비바람을 막고, 옆집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자 구해 온 다양한 자재들로 외벽과 방을 만들며 뼈대뿐인 사무실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완성해 갔다. 이들이 채운 것은 비단 미완성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였다. 그들은 게시판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용공간을 청소하기도 한다. 즉흥적이고 자발적으로 운동장, 교회, 상점 같은 공간을 만들어 건물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모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계단은 쉬엄쉬엄 오르내리며 이웃과의 유대감을 쌓는 가장 주요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 미완성의 탑이야말로 최소한의 느슨한 질서와 자율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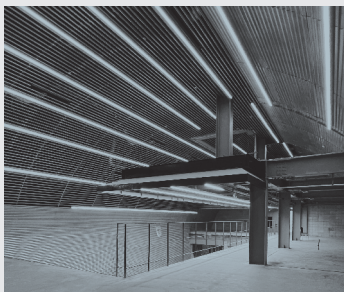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2층 미디어실
중 2층 네트워크 라운지
하 3층 청소년 전용 공간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청소년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다목적홀
중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 변화
하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해 공간의 형태나 그 공동체의 관계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방청소년문화의집도 처음부터 벙커의 원형 스케일을 복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채우지 않고, 그것들이 시간과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장소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보고 입체적 광장과 집, 그리고 길을 구성하였다. ICT나 VR 같은 기술 기반 프로그램들은 수년 주기로 환경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시설은 그러한 변화를 원래 ‘틀’을 유지한 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또한 벙커 출입구 앞마당에는 보도가 확장되고 전면에 경사지를 활용한 ‘숲속 음악당’이 들어섰다. 이곳은 녹지 스탠드와 광장을 구성하여 쉽·외부공연·강연 등 다양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두에게 열린 문화 쉼터가 된다.

프로젝트를 통해 의도한 것

건축에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조직하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은 어떤 의미로든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습성이 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와 그것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삶의 방식, 또는 공간을 매개로 한 관습화된 관계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건축은 일상에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형태의 물리적 완결성보다는 느슨하게 시간과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유도하거나 수용하며 작동하는 미완을 품은 여백의 건축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느슨함을 통한 가능성 중심의 건축으로 인해 공간은 단순히 주어진 기능을 담는 도구의 틀을 초월할 수 있다. 미완을 품음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여백을 만들고, 또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끄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auri 소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28

포럼 및 세미나
130

연구원 단신
138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혜원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현태환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강현미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박석환

수시과제

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는 건축기준 준수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업기간,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착, 공정성이 의심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자질, 지자체별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의 차이, 과도한 책임 부여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법제화, 1991년 5월, 「건축법」 전부 개정에 의한 「건축법」 상 정착된 이후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 제도의 도입 취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 건축행정절차상에서의 역할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 및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을 고려한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운영과 중장기적으로는 본래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관(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혜원

②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국가 공간정보 제도 및 정책은 1950년 「지적법」에서 시작하여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진화되어 왔다. 이는 공간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 '도화' 라는 지도 개념에서 '공간정보의 집적'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는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디지털트윈 및 스마트 시티 구축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밑바탕으로 국가기본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가기본도에 대한 제도적 개념이 여전히 축척 기반으로 되어 있어 공간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및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준 축척을 1:5,000 이상의 축척으

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공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 등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표준이 되는 국가기본도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맞춰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국가기본도 정보체계 구축 및 관계 공간정보DB의 연계성에 바탕을 둔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지형·지물의 표현에 머물러 있는 국가기본도를 인문·사회·경제·안전·물리적 속성이 결합된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정책 및 민간 공간산업의 기준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태환

③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0년-2022년)’은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14종의 생활인프라 가운데 복수 시설을 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국고 보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이 희망하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3년간 선정된 530여 건의 사업 가운데 취소 사업을 제외한 490여 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3년 10월 현재 90여 건의 복합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2년 이내 대부분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합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인프라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생활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으로 별도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고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에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이 공급될 경우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복합화사업 선정 기준에 시설 입지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을 포함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선정 이후 운

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아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저출산·고령화로 시설 이용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운영 관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은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공급되어 운영을 시작한 복합화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현미

④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인구 양극화와 더불어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청년인구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생존 전략으로 소멸 위험에 처한 도시와 마을은 교류인구나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쇠퇴한 지역의 새로운 인구유입 및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근무여건), 교육, 돌봄, 교통, 주거, 생활인프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요인 중 주거거점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복수 거점 생활자들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 확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복수 거점 생활자 관련 기초 조사 분석과 관계자 면담, 사례 분석을 통해 주거 공간 마련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과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지역에 복수 거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설정에 대한 제언과 복수 주거거점 수요에 따른 주거거점 지원, 인프라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에 대한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석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3일(금) 서울 종로구 엔피오피아홀에서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 건축물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다수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사업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도심 소규모 필지 활용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가능성’으로, 토지주택부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소규모 필지 활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가 ‘서울사회주택 리츠 운영 사례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커뮤니티 하우스 앤테이블의 사업구조와 공공형 리츠의 가능성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석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휴공간 활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주제로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유휴자원의 특성과 이를 위한 사업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의 진행으로 남철관 지역자산화 협동조합 이사장, 송정미 서울시청 상생주택팀장이 참여하여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 등 주택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2023 녹색건축 미래포럼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및 현안 검토'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3 녹색건축 미래포럼'이 10월 13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및 현안 검토'를 주제로,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분야의 미래정책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건설산업 ESG 분야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정착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공공부문 ESG 분야에 대해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공부문 ESG 도입과 운영'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ESG 트렌드 분야는 김주윤 ERM KOREA 이사가 '부동산 및 건축산업에서 요구되는 ESG 트렌드'를 소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토론에는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 전원이 참석하여 ESG 경영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 '경관 더하기 공공'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사)한국경관학회는 10월 26일(목) 문화역서울 284 RTO에서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관 더하기 공공'이라는 주제로,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공유를 통한 가치발견'을 마련하였으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을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이태겸 한국 섬진흥원 진흥사업팀장이 '모두를 위한 섬 환경+안전 디자인'을,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가 '자연경험공간, 마음풀과 바이오필릭디자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안전을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나권희 엠플래닝 대표가 '도시안전과 단절없는 공간환경'을, 김상아 MIJO 대표가 '아파트 화재 안전디자인, 실증 기반 개발 사례'를 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최준희 도시디자인 진성 대표가 '이용자 배려 건축경관디자인'을, 문현배 SEDG 공공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이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공공디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웅규 (사)한국경관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관 분야에는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신지훈 단국대 교수, 정해준 계명대 교수, 공공디자인 분야에는 강동선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신재령 팩스아이앤디 이사가 참여하여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6일(목)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오민정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활용 실태'를 주제로, 임시주거시설의 지정현황과 활용실태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조시는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임시주거시설 적정성 분석 사례'에서 강릉시와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통해 지역별 기본현황과 적정 임시주거시설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성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은 충북대 교수, 김미경 충북대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연구단장,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팀장, 윤동근 연세대 교수, 이종우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와 사무관이 참여하여 연구의 방향과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2023 보행공정포럼 제2~4회 개최



보행공정포럼 제2회 보도 울타리의 위험성과 모순



보행공정포럼 제3회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위험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와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공간연구위원회는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연구원 중회의실 및 온라인을 통해 '2023 보행공정포럼'을 개최하였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스쿨존 참사, 횡단보도 우회전,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상적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이라는 기조 아래 보행안전정책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첫 번째 포럼 이후, 9월 26일(화)에 열린 '제2회 보도 울타리의 위험성과 모순', 10월 31일(화)에 열린 '제3회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위험', 11월 26일(화)에 열린 '제4회 로봇과 보행자의 법적 지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가 11월 1일(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기존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기초발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시작으로, 현태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사공호상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홍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박진근 아이나비시스템즈 이사,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장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향후 이러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3 공공건축 포럼 ‘다시, 공공건축’ 개최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1월 7일(화)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1층 강당에서 ‘2023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시, 공공건축’을 주제로, 리모델링, 자산을 활용한 공공건축의 성취와 과제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시점 변화를 논의하고 미래 사회에서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용자 관점의 공공건축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천장환 경희대 교수와 최정익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건설사업관리단장이 ‘서울공예박물관 공공건축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정은 월간 SPACE(공간) 편집장이 ‘공공건축 발주제로서 설계공모 10년의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옹 소장이 ‘공원과 시민의 자부심’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상호 정림건축문화재단 실장,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1월 7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Ann Plas 벨기에 겐트시 도시계획실장이 ‘The story of Gent - the shortcut to sustainable mobility’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Kuniyoshi Naoyuki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 보행환경 안전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로 장창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지속가능교통팀장이 ‘GGGI sustainable mobility approach for the members’를 소개하였다. 네 번째로 Kishimoto Siori 일본 하트비트플랜(설계업체) 매니저가 ‘칸사이 지역 보행환경 개선사례’에서 난바 광장 거리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보행정책 성과와 과제’를 통해 국내 보행정책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승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신치현 경기대학교 교수,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정책연구센터장, 홍성민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보행사업 개선사업과 이면도로 및 주차 보행정책, 보행사업 평가 지표 등을 논의하였다.

2023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포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조건’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0일(금)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2023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7회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운영하는 부산도시재생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조건’라는 주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한계와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안나리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실장이 ‘지역을 바꾸는 혁신실험의 거점공간, 커먼즈필드춘천’을, 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세화마을: 질그랭이센터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윤정 영도문화도시 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말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16일(목)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인식과 국내·외 노인주거지원 정책사례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주거지원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베이비부머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인식과 주거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 '싱가포르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영광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이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서비스'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도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대응과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베이비부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공동포럼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1월 16일(목) 서울 연남장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기획되었다.

먼저,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 자원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노준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이 '공간과 인력, 콘텐츠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유우석 세종해밀초등학교 교장의 '공간으로 만든 해밀햇살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김지연 예술로 링크 양평 총괄PM 문화기획자가 '학교-지역 문화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와 함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하여 '아동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환경과 건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7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환경과 건강(Built Environment and Health)’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 James F. Sallis UC 샌디에이고 공중보건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및 지표를 개발하는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도시와 건축환경, 나아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먼저 James 교수는 국제환경보건단체(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and the Environment Network, IPEN)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을 소개하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과 건축환경의 의미를 짚어보고, 12개 국가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걷기 좋은 도시의 거주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지표로서 도시설계 요소와 보행성 지표를 설명하였다.

한편, 세미나 이후 세종시 보행환경 사례지역을 답사하며 보행자를 위한 대표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살펴보고 건강도시 및 보행환경, 보행안전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2023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CPTED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11월 29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CPTED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사회적 역할과 인식 제고뿐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포럼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성과와 사업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요 연구성과로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분석’과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CPTED 사업 솔루션의 효과적 설치를 위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성과에는 강신욱 대구달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셉테드 사업성과’와 박재현 공주경찰서 CPO의 ‘충청남도 공주시 셉테드 사업성과’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동희 한국셉테드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원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박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장이 참여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정책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The 2nd International Forum 'Hue – Information Technology –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HueCIT는 12월 1일(금) 베트남 후에에서 'The 2nd International Forum'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2년부터 베트남 후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속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 산업의 육성 및 협력을 담당하는 후에 지방정부의 소관기관인 HueCIT(Hue Center of Information Technology)와 함께 국제포럼을 추진하였다.

이번 포럼은 녹색교통, 스마트도시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Hue – Information Technology –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아래 도시의 역사적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영범 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조상규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적 접근 : 스마트도시+스마트빌딩'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포스트미디어, G바이크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문화, 환경 및 교통 분야의 최신 동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베트남 후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에서 바라보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3일(수)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에서 바라보다'를 주제로, 2024년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앞두고, 농촌재생과 지역활성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미래농촌'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로 채성주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현황과 과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해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자유토론에서는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차장,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등 3개 분야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스마트+빌딩 분야를 신설하여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총 12점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을 수여하였다. 스마트+빌딩 부문 최우수상에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리 A 미래'가 선정되었으며,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한 '모두를 위한 건축, 이렇게!'가 선정되었다.



©오차원

2023 공공건축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3 공공건축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에 관한 실무 및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건축사 등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첫 번째 교육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공공건축, '공(共)'을 넓히는 건축'을 주제로, 공공건축에서 발주처의 역할과 건축의 세 가지 요소 중 '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두 번째 교육에서는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공건축의 현황과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교육은 양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이해'를 주제로, 건축기획의 정의부터 업무 단계별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였다. 네 번째 교육에서는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목적과 수행기관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를 안내하였다. 마지막 교육은 김꽃송이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설계 공모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계공모제도의 목적과 운영지침 주요 재개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MOU 체결

©한국기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11월 14일(화)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평화빌딩 옥상온실에서 새로운 유형의 탄소중립형 건축물 및 도시의 지속적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19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옥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정에너지 환경시스템 신기술의 물리적 및 공간단위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보 및 기술 자료 공유 ▲새로운 유형의 탄소중립형 건축물 및 도시의 지속적 개발·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세미나, 컨퍼런스 등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등에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양 기관은 건물 일체형 옥상온실 인증을 통해 옥상온실 표준 설계와 건축기술개발, 관련 인증과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7일(금) 부산 서면 경암홀에서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수상식'을 개최하였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경관 관련 국제 시상제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심사를 진행하여 본상 후보작을 선정하였고, 5개 기관의 심사자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에서 총 9개의 본상을 선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추진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하였고, 도시경관부터 마을경관, 농·어촌 경관(건축, 도시재생) 등 사업유형도 다채로웠다. 국내 수상작은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홍대 레드로드 조성(서울특별시 마포구청)', MBC 빈집살래 in 어촌 - 빈집재생프로젝트(MBC)'가 각각 본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수상식에서는 9개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작품별 수상자의 발표와 참가국 간 국제교류행사가 진행되었다.

2023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1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동 연구 수행, 논문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자	연구주제
김정인	도시 내 공공녹지공간 재생수단으로서 Green Benefit District에 관한 연구
구한민	추가 UAM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입지 건축물 선정: 2단계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박우진	자율주행차량 도입단계별 가로환경 내 보행자의 인식
구새안	경관자원조사와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의 비교연구
우소영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건축자산의 관리와 인식
오하늘	저층 주거지 내 유형별 생활가로외 범죄 특성 연구
홍현도	노후경사주거지 내 빈집을 활용한 거점시설 입지 분석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9일(화) 네이버 1984 사옥에서 열린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에 스마트+빌딩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관과 함께 MOU 체결 및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였다.

지난 2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마친 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빌딩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후 스타트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빌리티 환승형(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난응급형(위례 가천길병원 신축)’, ‘지역주도 버티포트형(경기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대한 공동연구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1일(목)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건축법령 질의응답 지원 시스템 ‘(가칭)아키로(ArchiLaw)’는 2023년 7월부터 수행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의 결과로 구축되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해석 사례의 약 18%가 「건축법」과 관련되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민원은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질의응답 및 해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3년 발표된 GPT-4 모델을 활용하여 「건축법」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키로는 사용자 질의와 법령내용의 임베딩 벡터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시멘틱 검색 기술(Max Marginal Relevance)을 활용하여 참조법령 조문정보를 생성한 후 GPT 모델을 거쳐 최종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건축법령 질의응답 시스템 아키로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키로의 개발 책임자인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발과정을 발표하고, 시스템 시연을 선보였다. 이후 이강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승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이광한 해안건축 소장,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건축공간연구원 2023년 수행 연구과제

기본과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민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현태환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백선경

제조·조립을 위한
설계(DfMA)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희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
문보람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종범

중·소규모 유희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박석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박일향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성준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박성남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여경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윤호선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방안 연구
남궁지희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조영진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향 연구
김준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농촌특화지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여혜진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손은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발
이은석

전기차 확산에 따른
주거지역 충전설비
설치·운영 방안 연구
권오규

수시과제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방안
이주경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혜원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현태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조상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방안
강현미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박석환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유예슬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안의순

수탁과제

제2차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김성준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고영호

건물부문 2030 탄소중립 세부
이행 로드맵 수립 연구
박성남

민관협력력을 통한 도시 새마을을
생활인프라 활성화 방안 연구
이여경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3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지역 공간환경 통합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임유경

생활권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기준 마련 연구
성은영

2022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엄운진

건축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
감리제도 개선 연구
김은희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 활성화 및
부문 간 연계방안 연구 : 건축물
시장을 중심으로
박성남

공작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허한걸

남측반환부지 임시개방(확대)을
위한 사전기획용역
임유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평가지표 개발
임보영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김영현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여혜진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권오규

문화유산 관리 체계에서
세계유산지구 지정 방안 연구
이규철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 연구
성은영

농촌형 특화지구
지정기준 설정방안
여혜진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김꽃송이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선정기준 마련 연구
남궁지희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계획 수립
이상민

2023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용역
임보영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용역
조영진

중장기 농촌 주거개선
로드맵 마련
성은영

4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제도
합리화 정책연구
김은희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
심경미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김영현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수집 및
홍보방안 연구
엄운진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안의순

2023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건축물관리제도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조영진

2023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엄운진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
오성훈

'23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험사업 모니터링
서수정

'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2) 모니터링
이상민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옥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이은석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은석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김은희

보행안전지수 시범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남궁지희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오성훈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스마트플러스빌딩 로드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상규

2023년 취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관리 위탁용역
이여경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
오성훈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남성우

공원전용 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오성훈

공공건축물 관리 및 운영
기술개발 기획
김상호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헬프데스크
운영 지원
김영현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강현미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심경미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연구
심경미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기획
남성우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2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2-1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적 개선방안 :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2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3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4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5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7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8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9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택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아동친화적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3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4
건축행정 통계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5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6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7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2
다양한 거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3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추거문화 정책과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4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5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6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7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8
스마트건축 인증 도입 및 운영 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3
스마트도시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4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5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예측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6
가상환경을 활용한
법제에방환경설계 요소 도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7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를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8
지역자원 활용 기반의
도시재생회사 사업모델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9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0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복복지센터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1
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연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6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택제도 도입 방안 연구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7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3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8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2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9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3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5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움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0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6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1 공공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1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2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4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3 고령자 건강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4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5 서울시 도로다이어트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2018~2019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6 리빙랩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주거계획 지원방안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6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4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7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8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정책개선 방안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1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0-9 건축물 면적·높이 선정기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2020년 연구보고서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2022
오성훈, 남궁지희,
김영지, 변혜영
비매품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이여경, 이주경,
김민지, 홍예은
비매품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이규철, 박채린
비매품



제주 한옥, 박씨초가 이야기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태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윤
비매품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이여경, 김준래, 오세원
비매품



**어린이의 발달행위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2**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비매품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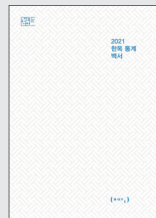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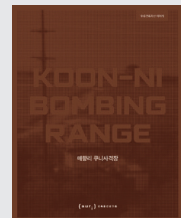
**국토경관
GOOD PRACTICE 3**
심경미, 이세진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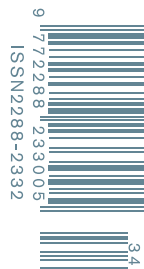
2021 한옥 통계 백서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한수경, 김영지
비매품



**우주건축자산 이야기
- 매항리 쿠니사격장**
이규철, 이세진, 이연경,
김용한, 김궁우, 김기웅
비매품



34
₩ 12,000원

(a u r i) 건축공간연구원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www.auri.re.kr